

2014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4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간사

2014년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6·25전쟁을 비롯한 숭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왔으며, 자랑스러운 조국 근대화를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임무 수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촌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고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전력을 질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비대칭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군비경쟁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외 테러, 사이버 공격, 감염병, 대규모 재난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 시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부대 여건을 조성하고, 장병 정신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지역과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의 수준과 분야를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 국방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안보정세, 국방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여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구조는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전환해 나갈 것이며, 고효율의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국방운영을 개혁할 것입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인 국방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우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강한 군대의 출발점이자 참다운 군기강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영 내에서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의식과 문화,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군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 인권 보장 및 인성 함양, 초급간부의 리더십 강화, 병영생활의 폐쇄성 극복 및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에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선정한 박근혜 정부 출범 첫 2년 동안의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국방정책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병영문화 혁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민 신뢰 제고 등에 대해 소상히 담았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국방3.0,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의 추진 과제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전 백서와는 달리 QR 코드를 담아서 국방 관련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방위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군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관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3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20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34
제2절 국방정책	37

제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4
제2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6
제3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2
제4절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 완비	65

제4장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78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85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및 전쟁지속능력 확충	89
제4절 국방정보화 발전	99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06
제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14
제3절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120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 평화에 기여	131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제1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146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51

제7장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제1절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58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쟁력 강화	165
제3절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69

제8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제1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176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81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8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1

제9장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제1절 국방규제 개선 및 국민 권익 증진	198
제2절 참전군인·희생장병 예우 강화	204
제3절 대국민 재난 및 안전지원체계 발전	208
제4절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 개선	212
제5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216

부록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220
2. 서울안보대화(SDD)	225
3. 중국군 유해 송환	231

일반부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36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38
3. 남북 군사력 비교	239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40
5.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40
6.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41
7. 남북 군사관계 일지	242
8.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9.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6
10.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258
11. 제45차 SCM 공동성명	260
12. 제46차 SCM 공동성명	263
13.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266
14.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8
15. 파병부대별 예산	269
16. 연도별 국방비 현황	270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1
18.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72
19.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73
20.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74
21. 국방기구도	275
22.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77
23.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5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3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20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식(2014년 3월)

제1절 세계 안보정세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강국 부상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지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위협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 분야의 불안정성과 미래 전쟁 양상 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심각성도 증대되고 있다.

1. 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제질서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 요인들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와 첨단 과학기술 및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계속 강화하고, 미국과 신형대국관계¹를 형성해나가면서 세계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외연 확대 추진, 러시아의 과거 영향력 회복 시도, 인도와 브라질의 지역 강국화 등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 간에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국들의 비중과 역할도 커질 것이다.

2. 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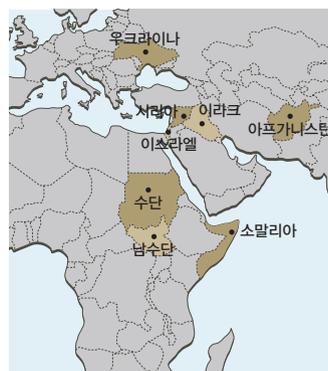
세계 각지에서 영토, 종교, 인종 문제 등 뿌리 깊은 갈등 요인으로 인해 국지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으로 미국·유럽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하자 이에 반발하

1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지는 중국의 제안으로 총통과 대립 자제, 상호 존중, 협력과 공영 등을 골자로 함

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정권이 퇴진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크림반도 분리독립 투표가 실시되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였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다. 크림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분리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진행되었다. 2014년 9월 민스크 휴전 합의 이후에도 산발적 교전이 지속되는 등 불안 요인은 내재되어 있다.

〈도표 1-1〉 주요 분쟁지역



중동지역에서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미군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철수한 지 3년 만에 이라크에서는 정부군과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²)’ 사이에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에 대한 공습을 미국에 공식 요청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14년 8월에 이라크에 있는 ISIL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였다. 미국과 일부 중동국가들은 2014년 9월에 시리아에 있는 ISIL로 공습 범위를 확대하였다. 시리아 내전에 따른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약속하면서 2014년 1월에 시리아 정부와 반군(시리아국민연합) 사이에 ‘제네바 II 평화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4년 6월과 7월에 발생한 ‘청소년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측은 미국, 이집트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2014년 8월에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국가 간 영유권 갈등이 안보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함정과 전투기를 투입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14년 1월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재판소에 남중국해 관련 중재재판을 신청하였으며, 5월 아세안(ASEAN³)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분쟁 당사국들에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⁴)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⁵)이 수행한

2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4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5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유지 및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구성된 다국적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대테러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은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치안질서 유지 책임을 아프가니스탄 정부로 이양하는 데 합의했으며, 2013년 6월부터 이양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7월부터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건팀(PRT⁶)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쉬노 부대를 추가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6월에 모두 철수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들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 이후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혼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독립한 남수단에서는 종족간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되고 있어 이를 종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⁷는 2014년 1월부터 평화협상을 중재하고 있고, 같은 해 5월 유엔은 기존 7천여 명에 5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여 치안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수단의 다푸르 지역 내 종족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비에이 지역은 수단과 남수단 귀속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지역화 되어 있다. 소말리아도 내전 소강 이후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3. 초국가적 위협 확산으로 안보 불확실성 증대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위협은 더욱 다양해지고,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제2087호⁸와 제2094호⁹를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11월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과 이란은 이란이 고농

6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7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체.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8개국으로 구성(IGAD :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3년 1월에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채택한 결의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에 채택한 결의로 북한 은행의 신규 해외 활동 금지 및 다량의 현금 밀반입 단속,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회 물품 이동의 전면 차단 등이 핵심내용임

축 우라늄 제조를 중지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데 합의하고, 2014년 2월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 테러 위협 방지뿐만 아니라 핵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 물질 및 관련 시설 방호, 원자력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수년간 중동,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테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13년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테러 발생 건수는 9,7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3%나 급증하였다. 특히 테러리즘이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될 경우 국제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도 그 수행 주체가 조직화되고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어 87개 국가, 18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해적 행위로부터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도 국제사회의 주요한 안보 현안이다. 국제사회는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¹⁰을 창설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20여 개국이 소말리아 해역 및 아덴만에 함정을 파견 중이며, 우리 정부도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가 2012년 297건에서 2013년 264건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 11월에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구조팀을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도 아라우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건물 복구와 의료지원 등 재건활동을 적극 수행하였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¹¹)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19,000여 명이 감염되었고 7,5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유엔 안전보

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 의거 2009년 1월에 해적 퇴치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소말리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케냐, 예멘, 세이셸, 탄자니아)와 주요 이해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60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음. 또한 유엔, 유럽연합, 국제해사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0개 국제기구 및 해운협회가 동참하고 있음.(CGPCS :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11 World Health Organization

장이사회는 2014년 9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국제사회는 의료인력, 의약품, 의료기기를 지원함은 물론 치료시설을 건립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4. 다양한 안보 위협 대두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마찰과 갈등의 소지도 많아졌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국가별로 경제개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한 국가의 금융·재정위기가 다른 국가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날로 증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빈곤문제, 자원고갈, 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규모 재해 등과 결합하여 개별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에는 전통적인 전쟁 양상이 상존하는 가운데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규모 전쟁 또는 국지전 형태의 전쟁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첨단무기를 이용한 장거리 정밀타격·스텔스 공격 등 첨단 정보기술전 형태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약소국 또는 비국가 세력들은 상대적인 군사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러, 비대칭전, 이념전, 심리전이 복합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미래 전장은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전쟁 양상도 군사력 사용이 수반되는 물리적 전쟁과 사이버전 등의 비물리적 전쟁이 혼재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의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부상으로 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1.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과 상호 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 협력의 수준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즉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2·3위의 경제대국이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 통합 논의도 진행되는 등 경제 분야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역사인식과 영토·영유권 문제, 북핵·미사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안보의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안보협력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2. 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동북아는 당분간 미·중관계가 지역 안보질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동북아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중관계는 대체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 역시 국익과 영향력 확대 경쟁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들은 군사력 증강, 동맹 및 협력관계 강화, 다자협의체 주도권 확보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지역 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지역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해 보면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4」(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 2.), 일본 방위백서(2014) 등 관련자료 종합(국방비는 2013년 기준)

* 전투(폭)기는 해군 전력을 포함하였으며,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숫자임

| 미국 | 미국은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상군을 중심으로 군 규모를 감축하고 원거리 전력투사능력은 제고하면서 아·태 지역 전력을 증강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와 대규모 국방예산 감축 상황을 반영해 「4

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¹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국방전략의 핵심원칙으로 미 본토 방어, 전 지구적 안보 구축, 전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²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³ 등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해·공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육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고도로 훈련되고 현대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정규군은 전시 최대 규모 57만명에서 44~45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나, 특수전 부대는 증강할 계획이다.

해군은 미래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해군전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최대 6척의 항공모함 등 함정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2014년 51척에서 2015년 58척, 2020년 67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18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공군은 차세대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전자 기술, 무장탐재, 전술 및 훈련 부문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호주 다윈에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였고, 2014년 4월에는 필리핀과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 및 사용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하였다. 싱가포르에도 연안 전투함을 최대 4척까지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 일본 | 일본은 2013년 12월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발족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전략지침과 '적극적 평화주의'⁴를 제시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1 미 국방부가 「국방수권법」에 따라 1997년부터 4년 주기로 발간해 의회에 군사력 운용계획과 군사전략을 보고하는 문서(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

2 1996년 미·중 간 대만해협 갈등을 계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발전된 개념(A2/AD : Anti-Access and Area Denial)
· 반접근(A2) : 작전지역 내로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
· 지역거부(AD) : 작전지역 내에서 미군 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것

3 미 해·공군력의 유기적·융합적 군사 운용과 발전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시도를 무력화하는 합동작전 개념

4 일본이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유지와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구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추진

것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고, 무력공격이 아닌 도서 침해 상황에 자위대를 활용하고 국제평화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과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12월에 「방위계획대강」⁵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⁶을 발표하고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였다. ‘통합기동방위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열도 남부 도서 지역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작전 기본 부대인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여단의 일부를 ‘기동사단·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9,500톤 ‘이즈모’급 호위함을 포함하여 호위함을 총 54척, 잠수함은 총 22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며, 수륙양용작전을 지휘통제하고 병력과 물자를 전개 및 수송하기 위해 호위함과 수송함도 개량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공중우세 달성을 위해 오키나와에 F-15 전투기 비행대를 추가 창설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 예하에 창설하였다. 우주공간을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수집위성을 이용하여 공격 징후의 조기 탐지 등 탄도미사일 공격 관련 종합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우주감시를 담당하는 전문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소말리아 해역의 CTF-151 연합해군부대에 최초로 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였다.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과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실종항공기 수색작전에도 자위대를 파견하여 국제긴

5 향후 10년의 방위정책을 담은 기본문서로 안보 위협 평가, 방위정책, 방위력 기본개념, 방위력 증강 중점 및 목표 등을 제시함

6 향후 5년의 방위력 증강계획으로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개편 및 전력 증강 목표 등을 제시함

급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일본 정부는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방산장비의 성능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제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국제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Ⅰ 중국 | 중국은 2013년 11월에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1월에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은 2013년 국방백서에서 국방정책의 목표와 임무를 국가 주권·안보 및 영토 수호,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 보장,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유지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적극방어 전략을 기반으로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⁷⁾를 달성하기 위해 핵·미사일과 해·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중국군 체제 및 편제를 조정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적인 공격·방어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육군 항공병과, 기계화 및 특수작전부대를 발전시키면서 공지일체(空地一體), 원거리 기동 및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육군 항공 2개 연대와 특수전 2개 부대를 증설하였으며, 기갑 기계화 부대를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재편하고 있다.

해군은 원거리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3년에는 구축함 2척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신형 수상전투함이 취역하였다. 사거리 8,000km 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전략핵잠수함(Jin급, 094형) 1척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4척을 운용 중이다. 2013년 2월에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칭다오 군항에 배치하여 전력화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해군 최초로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를 창설하여 항공모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겸비’ 전략에 의해 신형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및 레이더 등 첨단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1년 1월에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에 처음 성공한 이래 2012년 10월에 경형 스텔스 전투기인 J-31의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Y-20 군용 대형 수송기의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전력화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정보화 전장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비하여 첨단무기로 해·공군력을 강화하여 적극 방어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하여 반(反)침략 및 통일 의 국방목표를 달성하는 개념

제2포병은 핵 및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통제하면서 전략적 위협과 핵반격, 재래식 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DF-41 전략미사일과 JL-2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탐사위성 ‘창어-3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고 달 표면 연착륙에도 성공하는 등 우주 강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 러시아 | 러시아는 「국가안보전략 2020」⁸과 「군사독트린」⁹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국방개혁 1단계로 ‘군 구조 및 정원 개편’을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2단계 ‘군 복지 문제 해결’도 완료하였다. 2014년부터 핵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저강도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 창설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총 7,585억 달러 규모의 ‘2020년 국가무기체계 획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현대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단 중심의 상비군 체제로 전환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분쟁 지역에 신속히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모체로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형전차(ARMATA, T-99), 대공미사일 (BUK-M3), 지대공 미사일(TOR) 시스템 등 국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전력도 보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군관구 지상군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다 기동성 있는 군으로 재편되고 있다.

해군은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2013년에 19,400톤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건조하여 태평양함대에 1척을 배치하였으며, 2014년까지 전략핵잠수함 1척과 프랑스제 미스트랄급 상륙함 1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 감차카반도에 잠수함 기지도 건설하고 있다.

공군은 정밀타격 및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원거리 작전 및 정밀타격 능력이 향상된 5세대 전투기(T-50, PAK-FA)를 개발하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핵과 재래식 무기 모두 탑재가 가능하고 장거리 투사능력이 강화된 5세대

8 2009년 발표한 정치·경제·사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안보기조 문서로 국가안보목표를 ‘러시아의 세계 강국 위상 강화’로 설정하고 세계 5위권 경제대국 진입,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안정적 경제발전 방향 등을 제시함

9 2010년에 발표한 국방에 대한 국가의 전략지침.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가장 중요한 군사위협으로 상정. 최신 군사독트린은 해외 거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파병, 핵무기를 전쟁 억제 수단으로 간주한 저강도 분쟁에 대한 대비책,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점적 증강 등을 수록함

전략폭격기를 구비하기 위해 전략폭격기(Tu-95)와 4세대 초음속 전략폭격기(Tu-160)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국지적 대공우세권 확보를 위해 최신예 전투기 S-35s 12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대공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400km의 지대공미사일 S-400을 배치할 예정이다.

북극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고 북극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북극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우주공간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 기술 및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인공위성 100여 기를 배치하여 정보 수집, 통신 및 항법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략미사일 방어와 위성방어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조기경보, 지휘통제 및 요격체계로 구성된 항공우주방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함은 물론 체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재래식 전력의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 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¹를 내세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 일당 독재체제이다.

2012년 4월 공식적인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이후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당·군·정 지도부의 세대교체 등을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정치적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전격 교체하는 등 잦은 지도부 교체를 통해 신주류 중심의 친정체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²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지방에는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며 일부는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재적 한계와 외자 유치 부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부족한 식량은 비축미를 배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식량 사정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적인 배급이 제한되는 중간계층 이하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다.

1 2012년 4월 11일 당 규약 개정을 통하여 제시된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사상 및 통치이념

2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협동농장, 협동공장 등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정책임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는 중국 등 외부 상품의 유입이 활발하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개인 간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계층별 빈부 격차의 심화는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마약, 성매매,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와 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북한은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公安기관의 감시를 강화하며 탈북자 통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Ⅰ 대남 정책 | 북한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도발→대화→보상→도발’의 고리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3월 8일에는 ‘남북 불가침 합의서’ 전면 폐기를 선언하였다. 3월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으로 남북관계가 전시 상황에 돌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4월 8일에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1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딪히자 2013년 5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남과 북은 7월 6일 당국 간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7번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데 합의하였다. 8월 23일에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도 합의하였으나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4일 앞두고 이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 들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국방위원회가 ‘국방위 중대제안’³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2월 5일에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합의함으로써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도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소형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2014년 4월)

3 2014년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제안으로 상호비방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핵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⁴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우리 함정에 포격을 가하였다. 특히 3월 우리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⁵ 발표와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에는 한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강화하여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5월 23일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발표하고, 6월 30일에 국방위 중대제안의 내용을 반복하는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대남 유화 공세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커드 미사일과 신형방사포 등을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기습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하였다. 특히 우리 측에서 관측되는 동해 군사분계선(MDL⁶) 근접 지역에서 다량의 방사포를 동해 북방한계선 해상으로 기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 중부전선을 방문하여 시찰 중인 김정은(2013년 6월)

북한은 우리 측과 7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측이 제시한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에 입각한 북한 선수단 수용 방침을 빌미삼아 실무접촉을 결렬시켰다. 북한은 내부 문제로 응원단 파견이 어렵게 되자 8월 29일 일방적으로 응원단 파견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반면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당 비서인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합의한 지 사흘 만인 10월 7일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미 동맹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상호 신뢰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 한미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제43차~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NLL : Northern Limit Line)

5 2014년 3월 28일 독일 방문에서 발표한 구상임

6 Military Demarcation Line

Ⅰ 대외 정책 |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유엔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 실험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를 각각 채택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 4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과의 '2·29 미·북 합의'⁷를 파기시킨 이후 북한과 미국 간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추구하면서 제4차 핵 실험을 공언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동시에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2013년 6월 16일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12월 18일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⁸)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⁹하였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도 일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은 경색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2013년 5월 최룡해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국가 부주석인 리위안차오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관계가 복원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의지 불변과 4차 핵실험 위협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앞서 한국을 방문하자 북한은 중국에 대한 간접적 비난을 통해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일부 가담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최룡해를 특사로 파견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도 납북자 문제, 북한 내 일본인 유해 송환 문제 등을 매개로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5월 29일 북한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7 2012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미·북 고위급회담의 합의로서,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 톤의 영양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되었으며, 2014년 11월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됨

재조사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납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은 시리아, 쿠바 등과 무기 거래와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등 역외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군사전략 및 군사 지휘구조

| 군사 전략 | 북한은 체제 생존을 최우선시하면서 기본 목표인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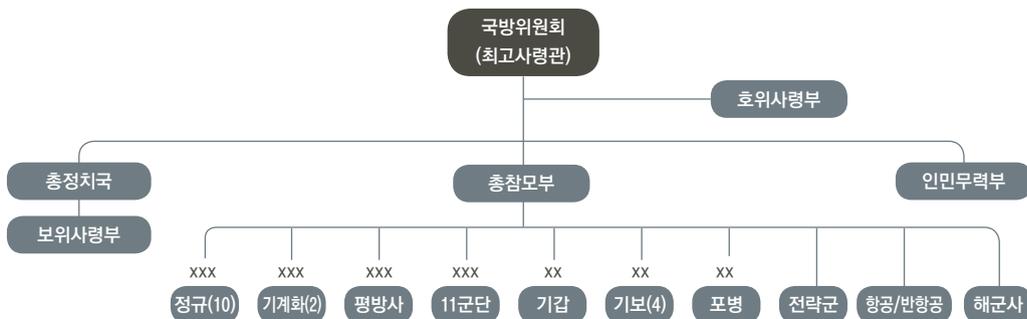
특히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 군사 지휘구조 |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최고 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등 국방정책을 지도하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예하에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 관련 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3>과 같다.

〈도표 1-3〉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XXX : 군단, XX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전략군사령부 : 구(舊)전략로케트사령부, 항공/반항공사령부 : 구(舊)공군사령부

3. 군사 능력

Ⅰ 지상군 | 지상군은 국방위원회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며, 최근 시험 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 고려 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mm 전인방사포 등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유개호를 구축하여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기계화부대, 상륙·공중전력도 전진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 지역과 전선 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 부대는 주력 전차인 T-54, T-55를 천마호·선군호 전차로 교체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기갑·기계화 전력을 증강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하고 작전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에 땅굴 및 비무장지대(DMZ¹⁰) 침투대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 및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및 배합작전 수행 등으로 역할

10 DeMilitarized Zone

이 확대되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북한 지상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

				
전 차 4,3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야 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100여 기

| 해군 |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상시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해군은 동·서해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경비정, 화력 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의 진출 지원과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¹¹)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수중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6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지역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5>와 같다.

11 Very Slender Vessel

〈도표 1-5〉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현황

				
전투함정 43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Ⅰ 공군 | 공군은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예하에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 공군기는 대부분 노후 기종이며 전투임무기 82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공군은 항공기의 추가적인 배치·조정 없이 우리의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생산·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1차적인 방공 임무는 북한 영공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책임지고 있는 해당 비행사단에 위임되어 있다. 전방 지역과 동서 해안 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고,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가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공군의 주요 보유 항공기 현황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 300여 대

| 전략군 |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비전력 |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중학교(고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총 770만여 명으로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유사시 정규군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분	병력	비고
계	770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 전투동원 대상 - 남자 : 17~50세, 여자 :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 향도 예비군 성격 - 남자 : 17~60세, 여자 : 17~30세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 중학교(고급반)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 전략무기 |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¹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

12 Highly Enriched Uran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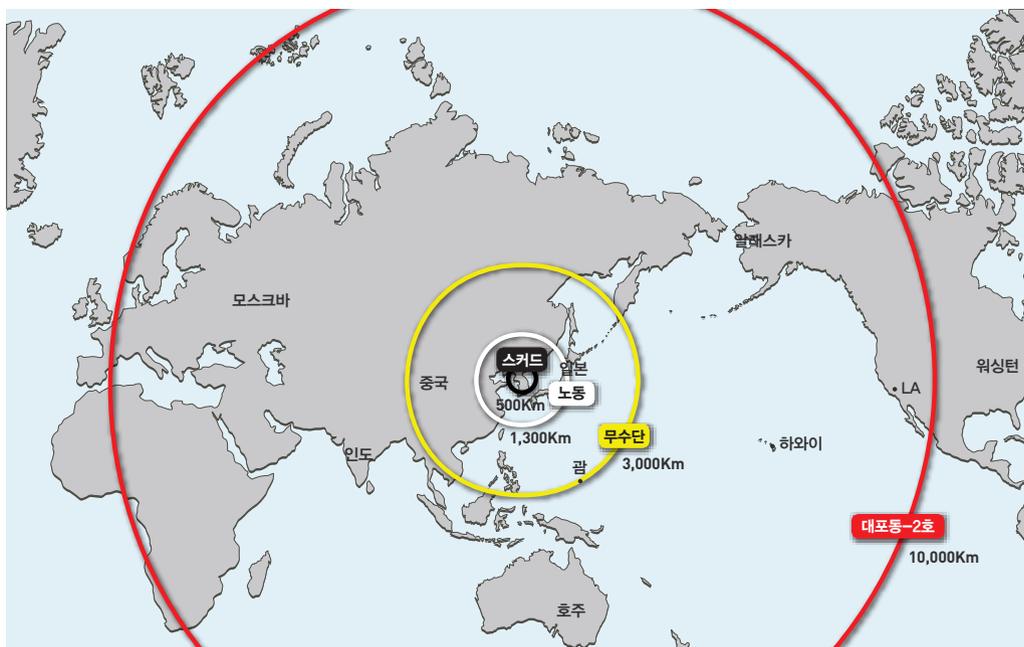
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는 <도표 1-8>과 같다.



정전협정 6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KN-08 신형미사일(2013년 7월)

<도표 1-8> 북한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쟁지속능력 |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300여 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 군수공

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화 된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가 구입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전 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2014년 12월)

제1절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고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국정기조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행복’,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



국가안보전략
e-book

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는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의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구조를 협력의 틀로 전환하고자 한다.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그리고 ‘신뢰외교 전개’를 3대 전략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각각 실행해야 할 추진전략이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다.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은 물론 장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안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등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남북관계만을 중시하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등 대북·통일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이며,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도 신뢰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신뢰외교를 동

북아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핵심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하여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각국을 상대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국방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국방운영의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국방 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이다. 그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이룩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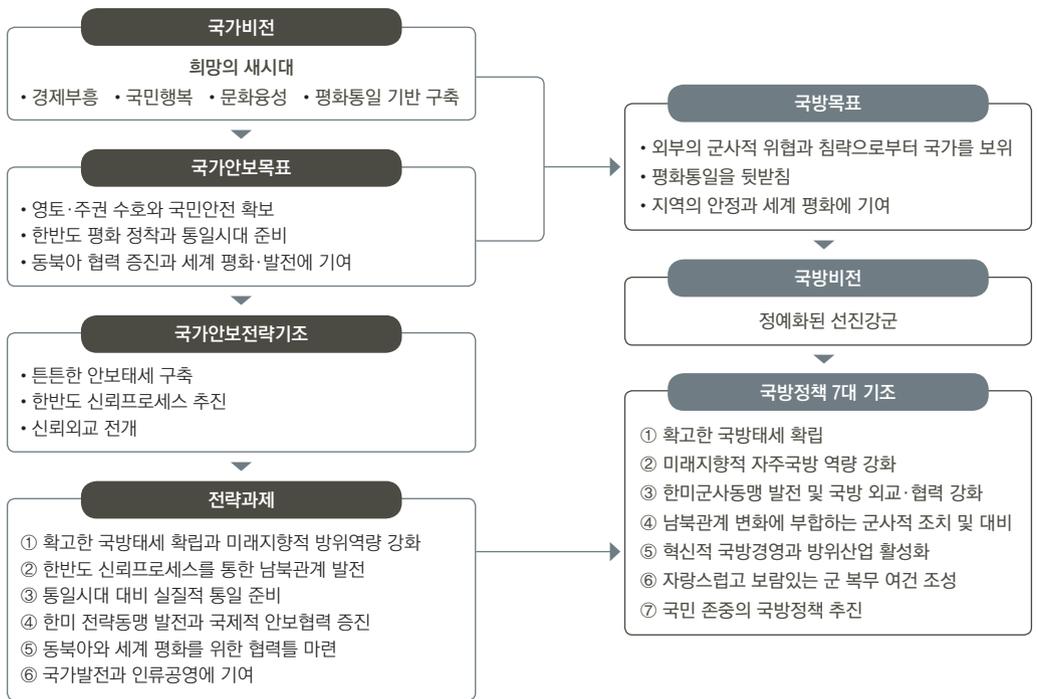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 |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말한다.

|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협력 강화, ④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을 7대 국방정책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에 융합하여 국방력을 창출하는 ‘창조국방’을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기조는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기조



3. 국방운영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기조, 안보현실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였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방위역량을 건설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국방운영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하여 재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군은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고 전투력의 완전성을 구비하는 등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임무 위주의 군대 정착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억제 및 대응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인 국방연구개발 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아울러 '임무형 지휘'

능력을 갖춘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간부를 육성하고 우수인력 획득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승의 주체인 군 간부를 정예화할 것이다.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적 준비 상태와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군사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지역 및 범세계적인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역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 국방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우리 군은 인권이 보장되고 군 기강이 살아 있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으며, 장병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장병이 생활의 편의를 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병 예방 중심의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병원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전문화·특성화해 나가고 총상, 화상, 다발성 골절 등 군 증증환자 치료를 위한 ‘증증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맞춤형 자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인가족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며 여군의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전역군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현역 장병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4
제2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6
제3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2
제4절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 완비	65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전시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한 전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강함으로써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군사조직 및 보유 전력

| 합동참모본부 조직 |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¹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²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으로 국방부 내 비상설기구로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4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분석실협실’을 신설³하여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안은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안)



1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

2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

3 분석실협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사지원본부에서 분리



국군 공익광고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주도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조기구를 발전시키고 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미사일사령부 : (구)유도탄사령부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 유도무기는 해병대 전력 포함

제1·3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부터 전방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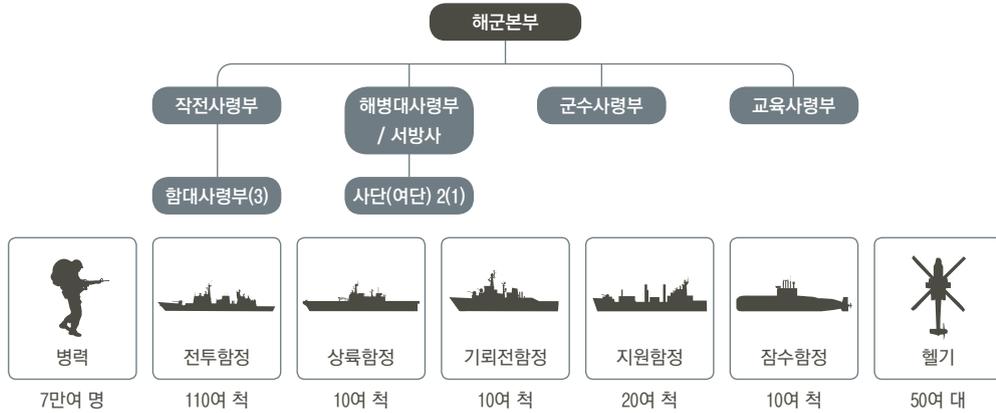
육군은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합동작전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대대급 이하 부대의 주야 근접전투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 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 전력과 다련장로켓⁴ 등의 대화력전 전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4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 서방사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⁵, 대잠작전⁶, 기뢰작전⁷,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을 방어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전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⁸는 평시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합동 전력의 한 축으로서 수중, 수상, 공중에서의 입체전력 통합운용 능력을 확보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5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6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7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 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8 서북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6월 15일에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되었으며,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



해군 홍보영상



해병대 홍보영상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작전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 방공유도탄사령부 : (구)방공포병사령부
- * 방공관제사령부 : (구)방공관제단
- * 공중기동비행단 : (구)공수비행단
- * 특수임무비행단 : (구)훈성비행단
- * 감시통제기 : 해군 항공기 포함

공군작전사령부는 항공작전을 통제하고 제공작전⁹, 항공차단작전¹⁰, 근접항공지원작전¹¹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북부 전투사령부는 작전사령부의 통제 아래 관할 구역의 영공을 방위하고 있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방공관제사령부는 2013년 6월 방공관제단에서 개편되어 한반도 전구 내 항공 통제, 공중 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공군은 차기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할 것이다. 또한 정찰·정보수집체계와 우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함으

9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CA : Counter Air)

10 적의 군사 잠재력이 우리 육·해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를 차단, 교란, 지연, 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AI : Air Interdiction)

11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 작전을 지원하여 군사목표 달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작전(CAS : Close Air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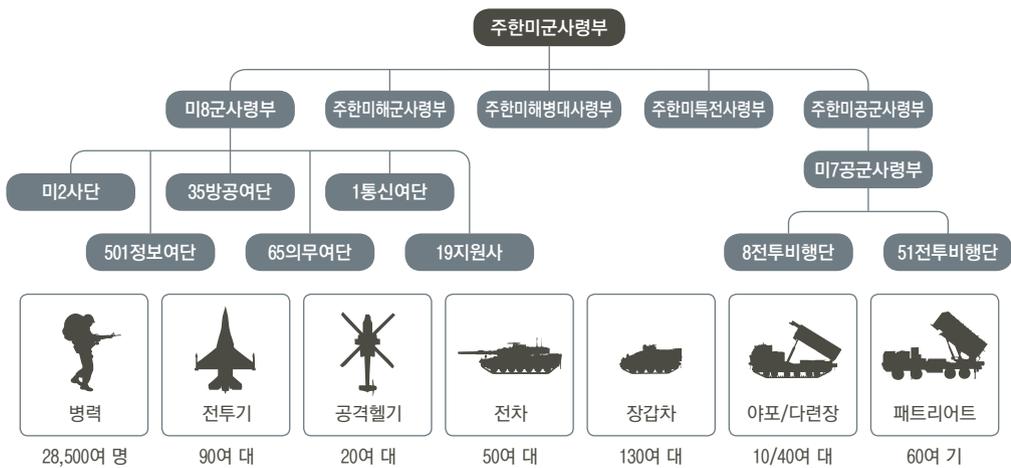


공군 홍보영상

로써 정밀타격 능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¹²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¹³으로 구분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지정된 전력이 투입된다. 전쟁 억제 실패 시에는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의해 계획된 모든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12 연합사 위기조치 절차 중 전쟁 발발 경보 이전에 전쟁 억제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3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미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2. 군사대비태세

|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 우리 군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호·영상자산과 인공위성 등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위협 등의 각종 징후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체제와 한미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 공동의 대응 절차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한미 양국은 위기조치예규 개정, 연합 위기관리연습 강화, 지휘통제통신체계(C4I¹⁴)의 상호 운용성 향상 등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와 같은 수사적 위협을 되풀이하면서 어업 단속을 빌미로 수차례 서해 북방한계선도 침범하고 서북도서 지역 해상 북방한계선 일대에 해안포를 이용한 화력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켰다. 또한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켓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였다. 최근에는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를 빌미로 총격 도발도 자행하였으며, GPS교란·정보체계 공격 등 전자전 및 사이버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양상과 전력 배치 변화를 고려하여 즉각 응징전력을 완비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입니다.”
- 대통령 말씀(국방부 업무보고, 2013. 4. 1.)



박근혜 대통령 전방 을지부대 순시(2013년 12월)

1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 Intelligence

육군 2사단 GOP 경계작전	특전사 제3공수 특전여단 특공무술	해군 특수전전단 공중침투작전	공군 특수부대 소개영상

대한민국의 영역



*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도발 시 현장에서 합동 및 연합 전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화력 도발과 기습 강점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240mm 방사포, 화력지원정 등 북한의 증강된 전력과 최근의 도발 징후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발전시키고 있다. 감시·타격능력을 보강하고 생존성 보장을 위해 진지를 요새화하는 등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순시(2014년 7월)

접적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철책과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¹⁵을 구축하고 있다. 감시·정찰자산을 통합 운영하고 표적을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지역과 대상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대응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와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육군항공의 타격태세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탐지·식별수단을 조정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방공작전 수행체계도 보완하고 있다.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시설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예상되는 도발 위협을 상정하여 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이후 각종 테러에 대비하여 육군 특전사와 해병대를 신속대응부대로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시설, 국가보안목표 등 핵심시설 공격에 대비한 작전활동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 북한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기초로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면서 핵, 화학·생물무기,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주요 전력의 대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유사시 추가적인 전력 재배치나 조

15 경계병력과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의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시장비 등을 통합 운영하는 감시·감지·통제시스템



국군 홍보영상



독도 홍보영상

정 없이도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 군은 지상, 공중, 해양, 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합동전력과 연합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효과 중심의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여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고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합작전¹⁶과 합동작전¹⁷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전적인 연합·합동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하는 연합방위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즉응 동원태세 확립 | 우리 군은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감축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함으로써 전쟁 개시 전 억지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동원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국지도발, 재난, 테러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선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토사단과 해병대사령부에는 병력과 장비·물자가 완편된 동원보충대대를 편성하여 전시에 전방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원예비군은 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같은 부대로 동원 지정하는 ‘권역화 자원관리체계’¹⁸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물자 동원을 위해 동원업체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동원지정업체가 정부조달에 응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원업체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 임용을 확대하여 전시 물자 동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16 2개국 이상의 군대가 장기적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식 협약이나 조약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작전

17 육·해·공군 중 2개 이상의 군, 합동부대 또는 필요시 편성되는 합동기동부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군사활동

18 병력동원 지정 지역을 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과 2권역(충청 이남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원 지정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

3.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태세

| 테러 대비태세 강화 | 우리 군은 테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 10월에 「군 테러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신속대응부대’와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별도로 지정·운영하여 대테러 작전 시 초동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최신 국내외 테러 첩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테러 대응 방안 등 협력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전술 토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연 발생적인 생물학적 위협과 인위적인 생물테러 발생 시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는 한 나라만의 대응과 조치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발생 가능한 생물테러와 자연 발생적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생물 방어 연습(Able Response)’을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유사시 정보 공유, 의료 협력 등 공동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테러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한편 안보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사이버전 대비태세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 공격, 2013년 3월 사이버 테러, 6월 사이버 공격 등은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 군은 사이버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고 공세적 방어 및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사이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초로 첫째,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국가전쟁지도지침」 등의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둘째, ‘합동사이버작전 교범’을 조기에 발간하여 물리전과 사이버전이 통합된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셋째, 사이버작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합참에 신설하여 사이버작전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매뉴얼을 개정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사이버전의 핵심전력은 전문화된 사이버 인력이다. 우리 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인력을 획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민간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학교에 사이버국방학과를 설치하여 2016년

부터는 사이버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사이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차세대 화이트해커 경진대회’도 국가정보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문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특화된 인사 관리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전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 기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신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이버 침입 감내기술¹⁹(Intrusion Tolerant Systems)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2014년 2월)

사이버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초국가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과는 2014년부터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 공유, 사이버 정책·전략·교리, 인력·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자간 사이버 안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제2회 서울안보 대화에서 사이버워킹그룹을 발족시켰고, 2014년에는 사이버워킹그룹 개념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사이버전 수행체계 및 작전교리 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등 전 분야에서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재난·재해 위협 대비태세 구비 |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아라우 부대를 파병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수색지원을 요청하여 항공기 2대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재난·재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²⁰), 아세안 확

19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중요시스템의 핵심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기술

20 Asean Regional Forum

대국방장관회의(ADMM-Plus)²¹ 등 다자안보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산하에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해양안보, 군 의료,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뢰대책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캄보디아와 공동의장국을 수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 아세안 10개국 및 대화상대국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는 국방장관협의체로서 3년마다 개최(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제2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우리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대응능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화학·생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미래전 양상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방 우주력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전략 발전

|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발전 | 억제전략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1978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¹에서 핵우산²을 제공해 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부터는 확장억제³를 보장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1년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년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을 보다 발전시킨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북한 정권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하였다.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핵 위기

1 한미 간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매년 양국 국방부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 핵전력으로 핵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비핵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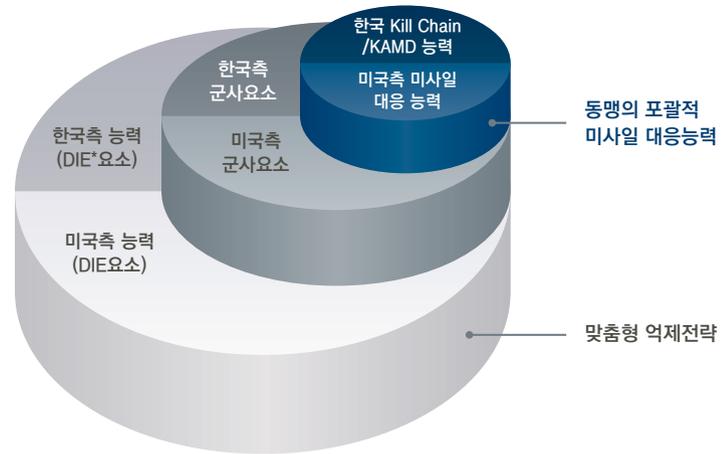
3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

4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설치한 한미 협의체(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동맹 능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이 보유하는 억제 방법과 억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도표 3-6〉 맞춤형 억제전략 체계도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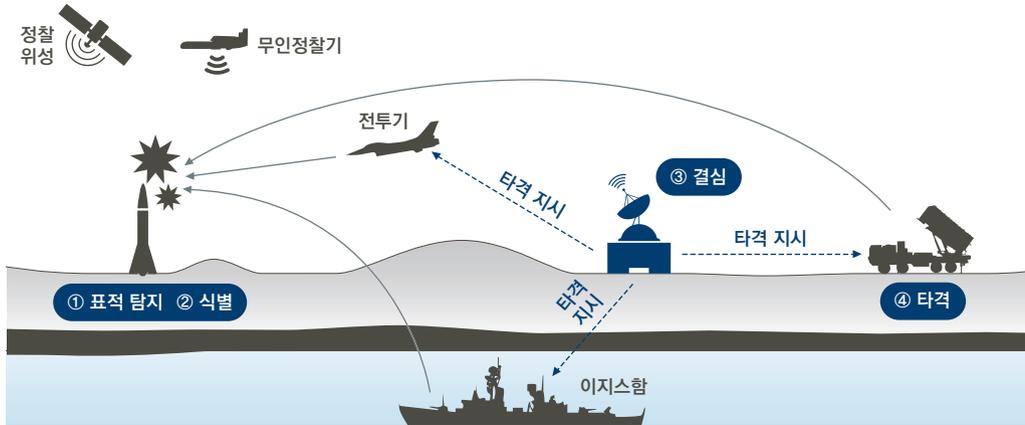
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단계적 발전 |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첫째,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능력을 활용하여 한반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서 ‘포괄적’이란 의미는 탐지, 방어, 교란, 파괴(4D)⁵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은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정립된 작전적 수준의 대응개념이며,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5 · 탐지(Detect) : 정보·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하여 방어·교란·파괴 노력을 지원
 · 방어(Defense) : 우리 측의 피해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소극적 방어 시행
 ·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비물리적 공격
 · 파괴(Destroy) :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및 지원 자산에 대한 공격

둘째,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 즉각 가능한 킬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한다.

<도표 3-7> 킬체인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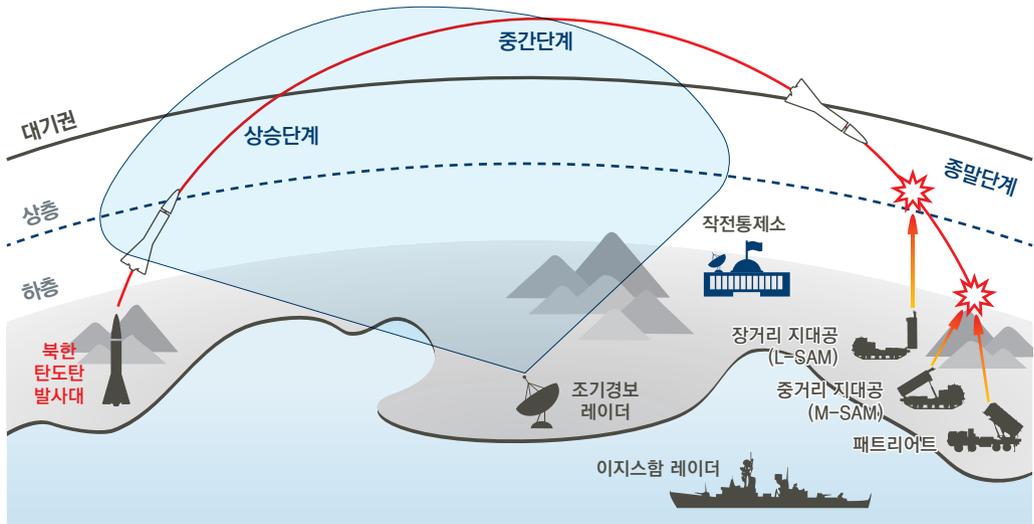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정찰 능력과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정보감시 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 전역에 있는 핵·미사일 관련 고정 및 이동시설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지대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⁶),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확보하여 전투기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술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해상 기반 타격능력도 증강할 것이다.

셋째,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도표 3-8〉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경보체계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한다.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 군은 요격체계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⁷)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탄도탄에 대한 방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요격 거리가 향상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⁸)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소요를 식별하고, 미국과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사일 대응능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2. 화학·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북한의 화학·생물 공격 능력과 테러, 질병 등 다양한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이 증대됨

7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8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에 따라 우리 군의 화생방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기에 공격 징후를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제대별로 화생방부대를 편성하여 신속한 화생방작전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호장비·물자와 예방·치료제 등 의약품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우리 군은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자연 발생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전 연습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와 보건부는 2011년부터 매년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은 양국의 40여 개 관계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범정부 생물대응연습이다. 2012년에는 '한미 생물방어 특별팀(TF)'을 신설하여 생물방어연습에서 도출된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화생위협 대응능력 종합발전 계획(가칭)」을 수립하여 화학·생물무기 대비·대응 태세 발전, 치료 및 제독 능력 향상, 연구개발 능력 발전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화학전 수행능력과 화생방 테러 대비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국방 우주력 발전

우주 공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정보 수집, 위성항법(Satellite Navigation)·통신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 양상에 부응하는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한 국내 법과 제도를 보완함은 물론 우주전력의 단계적 확보, 우주전문 인력 양성 등 운영체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은 국가우주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우주를 산업 및 과학적 측면에서 개발·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하여 우주안보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명시하는 등 우주안보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우주력 개발을 통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과 세계 평화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융합과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우주상황인식(SSA)⁹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과 국방 우주력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가 우주력 발전 수준, 재정능력 그리고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 우주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9 지상 및 우주에 설치된 광학, 레이더 시스템 등 우주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지구 주위의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인공위성, 우주 잔해물 등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충돌, 추락 등의 위험에 대처해 나가는 개념. 최근 국가 간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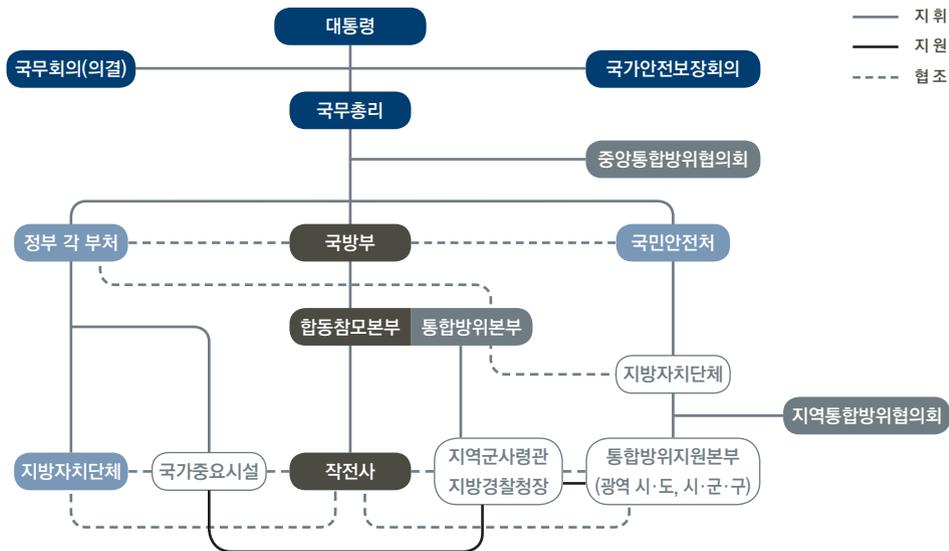
제3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발전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지속적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합방위 개념을 테러,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을 고려한 '전방위 총력안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정부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9>과 같다.

<도표 3-9>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 통합방위사태¹ 선포와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16개 광역시·도, 230여 개의 시·군·구에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된 의결기구이다. 통합방위 대비,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통합방위작전 훈련 시 각종 지원대책,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업무의 주관기구이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참의장이다.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태세의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 계획 수립과 시행의 조정·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조례와 예규 작성,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군·경찰·예비군·지방자치단체·민방위대 등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2. 통합방위태세 발전

정부는 최근 점증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화랑훈련² 기간 중 경찰이 주도하는 통합방위작전을 24시간 실시하도록 훈련 지침에 반영하였다. 과거에는 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되면 군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으나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고 경찰의 정보력, 기동력, 과학수사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주도하는 작전 시간을 늘린 것이다.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1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 갑종·을종·병종 사태로 구분되며 광역시·도에서는 을종 및 병종 사태만을 선포할 수 있음

- 갑종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
- 병종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의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2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

국가주요시설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별 방호전력 운용 등 방호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4년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통합방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에 정립된 통합방위 개념은 북한의 침투와 도발에 주안을 두고 정립된 만큼 테러,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을 고려하여 '전방위 총력안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2014년 2월)

제4절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 완비

우리 군은 군인의 직업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간부를 정예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전장효과를 최대한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군 주도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증가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1. 간부 정예화와 국방 전문인재 육성

| 우수 인력의 획득과 관리 |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에 따라 학·군 협약 체결을 통한 맞춤형 인력 획득 확대, 초급간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의 단계적 확대, 여군 비율 확대 목표의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군협약에 의해 군사학과와 부사관과를 설치하고,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 분야 부사관 획득을 확대하고 있다. 군사학과는 현재 16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20개 대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는 군사학과 재학생 전원에게 임관과 동시에 장학금을 보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일반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부사관과는 현재 53개 전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기존 부사관과 설치 대학 중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6개교에서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하여 부사관 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간부 정원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여 군 간부의 직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사와 중·소위 정원은 감축하고 상사와 대위·소령의 정원은 증가함으로써 2013년 장교의 20%, 부사관의 25%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던 것을 2025년에는 장교의 28%, 부사관의 47%가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 우수 여성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의 7%, 부사관의 5%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장교는 2015년,

부사관은 2017년에 여군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으로 전 양성과정이 여성에게 개방됨은 물론 군종병과와 육군의 3개 전투병과(포병, 기갑, 방공)가 추가 개방됨으로써 군 내 여성인력의 역량을 발휘할 여건이 보장되었다. 여군 인력 확대와 병행하여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 보호와 일터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들도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 국방 전문인력 육성 | 국방부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가속화, 사이버전·우주전 등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국방 전문인력은 전문학위교육과 국외군사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박사학위 교육은 교수, 연구원, 군 특수 기술 분야 인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연간 3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석사학위 교육은 이공계와 군사·안보 분야 위주로 연간 18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다양한 국가의 군사지식 습득과 지역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30여 개국의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군의 위상 향상 및 군사외교 영역 확대 등과 연계하여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교육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정착

| 학교 교육목표·내용·방법 최적화 | 병사는 핵심 전투기술을 습득하고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간부는 전투지휘능력과 교육훈련 관리능력 및 인성 지도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기존의 과목형 교육에서 전술상황에 근거한 과제형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국방부가 통제하는 22개 과목을 정신교육과 군사보안 2개 과목으로 최소화하여 육·해·공군에서 필요한 전술과 전투기술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방법도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교육과 전술상황 위주의 토의식 교육을 정착시켜 교육생들의 창의성과 전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임관종합평가제와 전술담임교관제의 정착 |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임관종합평가제는 육·해·공군 양성과정의 모든 장교·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하여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원만 임관시키는 제도이다.

종합평가는 필수 전투기술, 전술 지휘, 정신전력 과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역 전문평가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관종합평가제 시행 후 교육 참여와 집중도가 향상되었고, 교육생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등 교육훈련에 대한 열의가 크게 증대되었다.

전술담임교관제는 합동군사대학의 육군대학과 육군의 9개 병과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술담임교관제는 담임교관이 기본 전투원리만 교육하고, 전장 상황과 관련된 토의를 유도하면 학생장교 간 토의를 통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하는 것이다. 전술 중심의 토의식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장교들의 종합적인 상황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향후에도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초급간부 지휘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장병 정신교육 강화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군인 육성'을 위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 의지와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안보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장병 정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에 분산되어 있던 정신교육기능을 통합하여 2013년에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하였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창설됨으로써 정신전력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기능이 통합되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국가관·안보관 교육과 더불어 '군인정신'을 새로운 교육중점으로 설정하고 '군인정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인정신 교육과정'은 야전부대 중·소령급 장교들이 군인정신 역할모델 토의, 전적지 답사를 통해 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교재는 서두에 강의 개요와 교육 중점을 제시하였고, 장병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하는 등 교관들이 정신교육 시 기본교재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각 영역별 교육내용을 최신화 하는 등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아울러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영상, 만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참고교재도 제작하였다. 또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내재적으로 신념화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주도적으로 정신교육에 참여하는 '발표·토의식 교육'을 2014년부터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를 교육기관은 물론 야전부대에도 확대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4.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 부대훈련 | 부대훈련은 정신교육, 사격, 체력단련, 전투기량 등 핵심과목 위주로 운영하여 전투행동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으며, 연간 가용시간의 절반 정도를 전술훈련 위주의 부대훈련에 할애함으로써 부대가 해당 지휘관의 의도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전부대 훈련의 중점을 간부교육으로 인식하여 전기·전술 숙달과 병행하여 군법 및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고 있다. 부대훈련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마일즈(MILES)장비¹, 데이터 통신, 인공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부대훈련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군단급에 부대훈련 전문평가관을 배치하는 등 교육훈련 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천 가능한 연동식 부대운영계획과 주간훈련 예정표를 수립함으로써 부대 운영 변경을 최소화하여 전 부대원이 훈련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전환경에 부합하면서 전력화되는 무기체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훈련장을 통합하고 있으며, 훈련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교보제도 패키지 형태로 확보하여 실전적 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대급 이하 제대 병력의 차출을 통제함은 물론 훈련 후 정비도 훈련기간으로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부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전투 임무 위주 군대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 육·해·공군 주요 훈련 | 육군은 '전승의 능력과 태세'를 구비한 강한 육군을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 등 첨단 광학기술을 이용한 교전훈련장비(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육군 공지합동
훈련



육군 과학화전투
훈련



JSA 경비대대
폐쇄구역
근접전투 훈련

우선 평가를 통해 부대 수준을 먼저 진단한 후 부대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대별로 목표를 차등화하여 단계적으로 전투임무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부대훈련은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과 전투지휘훈련, 모의장비훈련 등 과학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소대급부터 여단급까지 실시하며 보병부대·기계화부대·특전부대 등 부대 유형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실시하는 연대급 훈련은 2016년까지 훈련장을 여의도 크기의 14배(18km × 16km)로 확장하고, 포병·박격포·헬기 등 연대급을 지원하는 각종 무기체계와 전장효과 묘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체계가 통합되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연대급이 과학화전투훈련단에 입소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중대급 마일즈 장비 활용 실전적 훈련

중대급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훈련은 이동식 중계소를 운용한 통신망 구성으로 주둔지 일대, 작전지역, 임의지역 등 다양한 지형에서 훈련 후 사후분석이 가능하여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대급 마일즈장비는 2014년 4식이 보급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식이, 2019년에 4식이 보급되어 총 20식을 운용할 예정이다.

전투지휘훈련(BCTP²)은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하여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지휘관과 참모는 제대별 부대지휘 절차와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을 숙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각 위게임 모의체계와 C4I체계를 연동시켜 최대한 전장과 가까운 상황에서 전투지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컴퓨터 모의기법과 실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을 연동하는 통합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의장비훈련은 가상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를 하는 훈련으로 현재 학교기관의 양성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군단과 사단에 모의훈련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훈련과 전장기능별 훈련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대급 이하 부대의 통합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병협동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생방전·대화력전·공중강습작전·대테러 작전 분야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합동전력이 참가하며 성분훈련과 해상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분훈련은 기본훈련으로서 대함·대잠·대공·상륙·해상항공작전 등 전투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상훈련은 특성화된 훈련으로서 기동훈련,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이 있다. 해상훈련에는 최신예 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기동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구분된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해상 대특수전부대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대잠전·상륙전·기뢰전·특수전·잠수함전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훈련으로는 코브라폴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대탄도탄 훈련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³) 등이 있다. 최근 2년간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0>과 같다.

<도표 3-10>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3년	17	14	11	3	3	1	2
2014년	18	14	11	3	4	-	4

순항훈련은 전 세계를 권역별로 4개 항로로 구분하여 매년 항로를 번갈아 가면서 90~120여 일 동안 진행된다. 2013년에는 14개국, 2014년에는 1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타 국가의 해·공군과 연합대공전, 연합 다자해군 통신 절차 교류도 이루어져 사관생도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함께 순방국과의 군사협력도 확대되었다.

3 Search And Rescue EXercise



해군·해병대
합동상륙작전



림팩훈련



레드플래그 훈련

공군은 모든 상황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방어제공훈련, 공세제공훈련, 항공차단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이 있다.



FA-50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

방어제공훈련은 영공 침범을 기도하는 적의 공중 침투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대량 항적 침투대응훈련, 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방공계획을 적용한 연합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세제공훈련은 적 지역에서 공중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는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인 맥스썬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다국적 연합전술훈련인 레드플래그(Red Flag),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등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코프노스(Cope North),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의 재난구호훈련(ARF-DiREx⁴) 등에 참가하고 있다. 국외 장거리 전력 투입과 복합임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급유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1>과 같다.

<도표 3-11>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3년	5	3	2	1	2	-	2
2014년	5	3	2	1	2	-	2

항공차단훈련은 적의 지원전력이 전방으로 증원되어 우리의 지상군과 해군에 위협이 되기 전에 이를 교란·지연·파괴하는 훈련이다. 우리 군은 이동표적의 탐지와 공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합 및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접항공지원훈련은 지상군과 해군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다. 야간투시경을 활용한 공격훈련, 지상군 과학화 훈련장과 연계한 훈련이 이에 해당한다.

4 Disaster Relief Exercise

이밖에도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 훈련과 적 특수전부대의 해상 침투에 대비하는 해상침투저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상모의훈련 장비, 공중전투기동훈련 장비, 전자전훈련 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는 유사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이다. 해병대는 합참 주관의 호국훈련, 해안침투대비훈련, 서북도서 증원 및 방어훈련 등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브라골드훈련, 환태평양훈련 등 해외 연합훈련에도 참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2>와 같다. 또한 지휘관 및 참모활동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한 전투지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상륙 기습·산악·수색·동계 설한지 훈련 등도 실시하여 실전적인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고강도 해상침투훈련

<도표 3-12>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국내			국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3년	10	9	9	-	1	-	1
2014년	14	10	9	1	4	1	3

합동연습과 훈련 | 우리 군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전력과 부대구조의 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1994년에 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 합참은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995년부터 태극연습을 시작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태극연습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합참이 주도하는 전구급 합동 지휘소연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태극연습은 실전적인 연습을 위해 전구급 합동작전 모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적의 위협 수준별로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국지도발과 다양한 위협 대비 작전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대부대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합참 주도로 매년 실시하는 전구 및 작전사령부급 기동훈련이다. 1988년 육·해·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통일훈련'으로 통합하였다가 1996년 '호국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합참이 통제하는 훈련과 작전사에 위임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국훈련 강습도하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민·관·군·경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후방 지역 종합훈련이다. 이 훈련은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화랑훈련은 2013년부터 충무훈련⁵과 일정과 상황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주기적인 반복훈련으로 조건반사적 행동을 숙달하기 위해 합동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연합연습과 훈련 | 키리졸브(KR⁶) 연습 및 독수리 훈련(FE⁷)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PX⁸)과 야외기동훈련(FTX⁹)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합참 주도로 연습기획, 통제, 사후검토를 실시하여 한국군의 전구 연합연습 주도 능력을 향상시켰다.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2008년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5 지역 단위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단체장 책임하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

6 Key Resolve

7 Foal Eagle exercise

8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조직의 임무수행연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참모활동 절차 연습,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의 적용 등을 숙달(CPX : Command Post Exercise)

9 Field Training Exercise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처음으로 호주군이 중대 규모로 참가하여 다국적 연합전력으로 진행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¹⁰) 연습은 매년 후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 연습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독 및 한미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면전 시 한미 연합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이 위기관리 연습에 동참하여 연습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향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는 미래지향적인 연합연습 시행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합참은 한국군 주도로 전구급 연합 및 합동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2014년에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¹¹)를 준공하고, 합동연습·훈련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워게임모델 개발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는 연합·합동연습을 지원하는 전담시설로서 연습통제와 모의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미 본토와 한반도에 위치한 한미 지역모의센터(BSC¹²)들을 워게임 전용망으로 연결하여 연합·합동연습은 물론 육·해·공군과 미군 연습, 학교기관의 전쟁연습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0 Ulchi-Freedom Guardian

11 Joint Warfighting Simulation Center

12 Battle Simulation Center

제4장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78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85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및 전쟁지속능력 확충 89
제4절 국방정보화 발전 99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안보 정세, 국방환경의 변화 요소 등을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였다. 국방개혁은 단·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군 구조 개혁은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 네트워크 중심 환경에서 공세적 통합작전이 수행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국방운영 개혁은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1. 국방개혁 추진 경과

국방부는 2005년 12월에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3년 주기로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왔다.

2009년 6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과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수립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다양한 군사위협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요소를 추가로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 등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였다.

2013년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과 비대칭 전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전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감시, 결심, 타격의 반응시간을 단축하고 전쟁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e-book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적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의 복지 수요가 증대되어 적정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국방개혁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4년 3월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였다. 군 구조 분야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간부를 증원하는 등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실전적 교육훈련과 효과적 인력 운영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원체제 개선과 예비전력 정예화,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군수운영 혁신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방개혁 주요 성과는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국방개혁 주요 성과(2013 ~ 2014년)

분야	주요 성과
군 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육·해·공군 본부 개편, 기능·조직 강화 및 유사 기능·조직 통폐합 · 군사전략 기본개념 발전(적극적 억제 → 능동적 억제) · 전력 증강 우선순위 조정(국지도발 위협 우선 대비 →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 · 북한 비대칭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 상비병력 5만 1천 명 감축 및 간부 비율 5.1% 확대(2006 ~ 2014년)
국방운영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군단 권역화 훈련장, 2함대 해상종합훈련장 등 실전적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훈련장 구축 · 군사학과(6개교), 전투부사관과(4개교), 부사관학군단(6개교) 등 학·군 협약 확대 · 여군 활용 병과 확대, 3사관학교 여성도 모집 등 여성인력 확대 · 51·52 향토사단, 해병대 내 동원지원단(3) 및 동원보충대대(32) 창설 · 군 물류체계 개선 시범 운영 및 군수품 현장관리자동화체계 구축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등 18개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 군용차량을 상용차량으로 교체 · 군 의료 발전 추진을 위한 '민·관·군 통합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방부·방위사업청 간 기능 조정 및 조직 개편 · 생명 존중의 사고예방시스템 정착 · 병 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 등 질병 예방 중심의 병영환경 조성

2. 군 구조 개혁 추진 방향

군 구조 개혁은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 네트워크 중심의 환경에서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휘구조 | 지휘구조는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과 합동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합동 및 연합작전 지휘능력과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할 것이다. 합참 중심으로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 조직과 작전지휘를 제외한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하여 개편할 것이다. 변화되는 합참 편성은 <도표 4-2>와 같다.

<도표 4-2> 합참 조직 편성(안)



합참을 미래의 적 위협에 대비하고 작전환경에 적합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 정보 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지휘조직을 최적화해 나갈 것이며 개편 시기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연계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병력구조 | 병력구조는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구비하고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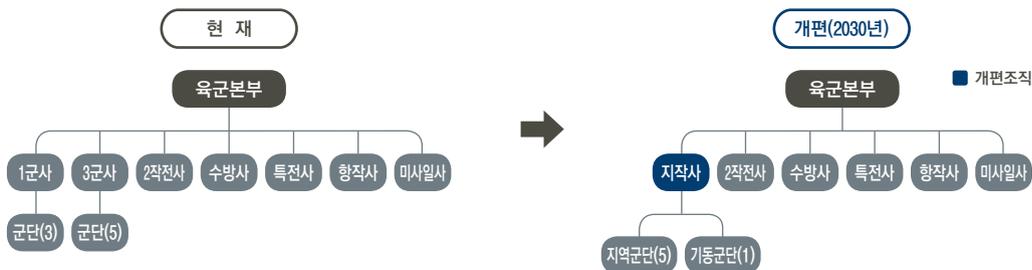
간부 비율을 증가시켜 병력구조를 정예화할 것이다. 육·해·공군의 간부 비율은 2025년까지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도록 정보·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군을 정예화하기 위해 육군 병력은 38만 7천 명을 유지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정원 내에서 부대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상비병력 감축 현황은 <도표 4-3>과 같다.

<도표 4-3> 상비병력 감축 계획

구분	상비병력	2014년 말	2022년	구분	상비병력
육군	49.5만여 명	 63.0만명	 52.2만명	육군	38.7만여 명
해군	4.1만여 명			해군	4.1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 부대구조 ▣ 육군은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에서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환시킬 것이다. 부대 개편은 북한의 군사 위협과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육군 부대구조의 주요 변화는 <도표 4-4>와 같다.

<도표 4-4>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육군은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정보, 작전, 통신 등 작전지휘 기능 위주로 편성하여 군단 단위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할 것이다.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지상정보단, 정보통신단, 근무지원단을 편성하고, 동부 산악지역에서 신속히 기동하여 적을 격멸하기 위해 산악여단을 편성할 것이다.

지역군단은 지상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전방 지역 축선별 책임지역을 방어하고 공격작전 시 주축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강할 것이다. 군단별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군 항공지원작전본부(ASOC¹)와 항공단·방공단·군수지원여단을 편성하여 전투지원능력을 보강하는 등 동·서부 작전환경에 맞게 개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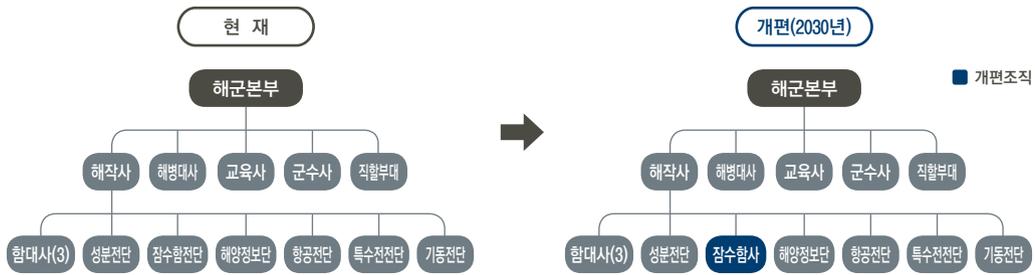
기동군단은 전략적·작전적 기동예비부대로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제대로 운용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보병사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계획에 따라 소야전군 개념의 군단 중심 작전수행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특히 접적부대를 우선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전투수행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능력을 확보하여 현존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해군 부대구조의 주요 변화는 <도표 4-5>와 같다.

1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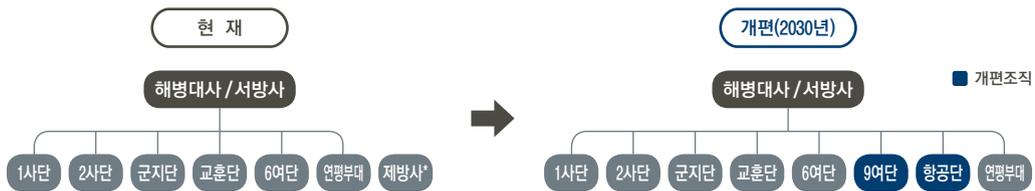
〈도표 4-5〉 해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해군은 현재의 잠수함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증편하고, 특수전전단을 개편할 것이다. 소형 전투함의 수는 줄이되 차기 구축함·호위함, 이지스함 등 중·대형함을 보강하여 기동형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해병대 부대구조의 주요 변화는 〈도표 4-6〉과 같다.

〈도표 4-6〉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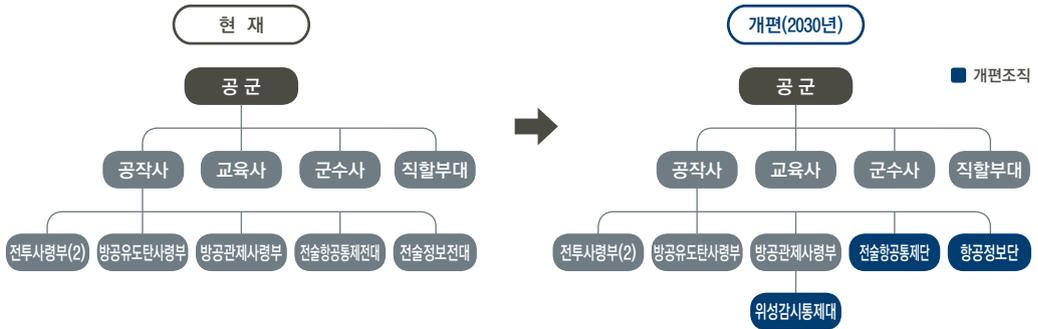


* 제방사 : 해군 예하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9해병여단(제주부대)을 창설하고, 해병사단을 개편하며 해병대 항공단도 창설할 것이다. 공중기동 및 공격 전력으로 운용이 가능한 항공단을 창설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할 것이다.

공군은 효과 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고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공군 부대구조의 주요 변화는 〈도표 4-7〉과 같다.

〈도표 4-7〉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공군은 현재의 전술항공통제전대를 모체로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항공정찰 및 정보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정보전대를 모체로 항공정보단을 창설할 것이다. 한반도 상공 위성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도 창설할 것이다.

| 전력구조 | 전력구조는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제대별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감시·정찰전력을 보강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 결심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 C4I체계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전력화할 것이다.

지상전력은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해상전력은 주변 해양 통제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공중전력은 공중우세 및 중심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국방운영 개혁 추진 방향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사격과 기동이 가능하도록 과학화된 종합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다. 인사관리제도는 군에서 소요되는 우수인력을 맞춤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학·군 협약을 확대하고, 초급간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 정원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동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권역화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꼭 필요

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까지는 예비전력 관리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은 2024년까지 208개의 대대 단위 훈련장을 44개의 여단 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체계를 적용한 실전적 훈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군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 다단계 군 물류체계를 2016년까지 원스톱(One-Stop) 개념의 군수지원체제로 단축할 것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확대하고, 비전투 분야 군용차량을 상용차량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소요제기·획득·운영유지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제기된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다.

사이버전 대응능력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군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복지 수준을 증진시킬 것이다. 직업군인의 적정 보수체계를 정립하고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012년의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영문화 쉼터와 실내 체육관을 설치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까지 확대 운영할 것이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보상도 확대할 것이다.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병 예방 중심의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병원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전문화·특성화해 나갈 것이다. 총상, 화상, 다발성 골절 등 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맞춤형 자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인가족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군의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한반도 전략환경 평가와 현존·잠재적 위협 분석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전력 증강 기본방향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유효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

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제대별로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무인정찰기와 다목적 실용위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지휘통제 분야는 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분야별, 제대별 지휘통제체계들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물리적·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생존성과 방호력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지상전력은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제대별 작전 책임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동성, 화력, 방호력,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된 전투체계를 구비할 것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 한국형 기동헬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전력은 주변 해양통제 능력과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우리 해양권익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상, 수중, 항공전력을 구비할 것이다.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차기잠수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적으로 기동전단을 신편할 계획이다. 상륙전력은 대형수송함과 상륙기동헬기를 추가로 전력화하고 제주도 통합방위를 위한 해병여단을 창설하고 해병항공단도 창설할 것이다.

공중전력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FA-50, 차기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를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우주 기반 감시전력 등도 확보하여 원거리 공중작전과 전천후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방호전력은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한 방어능력과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거리 대공유도무기와 같은 대탄도탄 방어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인명과 시설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호능력을 보강하며 사후관리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2. 주요 성과

| 2013년 전력 증강 사업 | 2013년 국방비는 34조 4,970억 원이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2년보다 2.8% 증가한 10조 1,749억 원이었다. 2013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31개 사업이었다.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은 <도표 4-8>과 같다.

<도표 4-8> 2013년 주요 전력 증강 사업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감시·정찰 / 지휘통제·통신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위성 전군 방공 경보체계	·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능력 보강 · 휴대용 위성·공지 통신 무전기
기동 / 화력	· K2 전차 · K-10 탄약운반차량	· 원격 사격 통제체계 · K-56 탄약 운반차량
함정	· 차기 상륙함 · 장보고-계급 잠수함	· 훈련함 · 상륙 기동헬기
항공	· 중거리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 전술항공통제단 · 레이저 유도폭탄 2차

| 2014년 전력 증강 사업 | 2014년 국방비는 35조 7,056억 원으로,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3년보다 3.3% 증가한 10조 5,096억 원이다. 2014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33개 사업이다.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은 <도표 4-9>와 같다.

〈도표 4-9〉 2014년 주요 전력 증강 사업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감시·정찰 / 지휘통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차기 열상 감시장비(TOD-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해상감시 레이더 · 항공 관제 레이더
기동 / 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 전차 · 대포병 탐지 레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다련장 · 원격 운용 통제탄
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수리-B(Batch-I) · 장보고-III급 잠수함(Bat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수송함 · 광개토-III 2차*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전투기(F-X) · FA-50 전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급유기* ·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2015년에 착수(계약) 예정

3. 2015~2019년 중기 전력 증강 계획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등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획득하여 킬체인(Kill Chain)과 한 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방지체계 등을 도입하여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전면전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둘째,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 감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 개편 필수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다. 작전지역 확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105mm 곡사포 성능 개량, 다기능 관측경 등 감시·정찰, 기동, 정밀타격 능력 위주로 전력을 보강하고 대대급 이하 야전부대의 주야 근접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차기 군 위성 통신체계를 통해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대형공격헬기를 운용하여 신속한 기동·타격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차기 상륙함을 확보하여 해양 통제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공중급유기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장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2개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103개 사업을 새로 착수할 것이다.

우리 군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의 다양한 위협과 전장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더 먼저,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결심하여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도표 4-10〉 주요 첨단 전력 확보 사업



수리온 홍보영상



김좌진함 소개영상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및 전쟁지속능력 확충

예비전력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전력이므로 상비전력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병력 및 물자동원체계 효율화, 전투장비 및 물자 현대화, 예비군 훈련 방법 및 여건 개선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한 조달·정비지원·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민·관·군과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통합 활용함은 물론 국제군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1. 예비전력 정예화

| 병력 및 물자 동원체계의 효율화 | 국방부는 2013년부터 병력동원자원 관리·지정을 주소지 단위로 실시하던 것을 권역¹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험 운영 중에 있다. 권역 단위로 동원자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예비군들의 동원지정부대 변경을 최소화하고 동원 소요에 적합한 특기가 지정되어 전투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자동원 소요를 책임 있게 산정하기 위해 제대별로 동원 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세청·국민안전처 등과 협업하여 동원업체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과 동원 지정된 업체에게는 정부기관 계약 입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비군 자원 관리와 훈련 업무뿐만 아니라 인원 및 물자동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²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1단계는 예비군 관리, 2단계는 인원동원, 3단계는 물자동원으로 현재 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4단계는 실시간 동원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동원능력분석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병력과 장비가 모두 편성된 동원보충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 전방사단과 군단에

1 병력 동원 지정 지역을 1권역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으로, 2권역은 충청 이남지역으로 구분

2 동원자원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신속·정확한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체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력, 장비·물자, 탄약이 완편된 동원보충대대를 투입하여 손실을 즉각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까지 후방지역에 168개의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유사시 전방에 투입할 것이다.

2018년 이후에는 병력과 물자동원 업무를 조정·통제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원집행기구는 평시에는 동원 소요를 통합적으로 관리·검증하고, 전시에는 각종 인원 및 물자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는 기구이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에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에도 부분동원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체계가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다.

| 예비군 편성 및 자원 관리 | 예비군은 임무에 따라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된다. 동원예비군은 주로 전역 후 1~4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로서 현역 군부대 증·창설이나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동원되어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향방예비군은 주로 5~8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로서 해당 지역이나 직장별로 향토 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예비군 훈련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정년연령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병사는 전역 이후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남녀는 누구나 향방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여성예비군 6,300여 명, 특전예비군 1,200여 명이 향방예비군에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예비군 규모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297만여 명이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공익광고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 총력전의 한 축으로 예비군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연차에 따라 훈련과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등 예비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향방작전 수행능력 제고 | 향방예비군이 보유한 노후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신형 무기로 교체하고 있다. 2016년까지 일부 부대에 남아있는 칼빈 소총을 M16A1 소총으로 전량 교체하고, 2017년까지 개인 방호에 필수적인 방독면과 방탄헬멧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통신장비는 2020년까지 민·관·군·경 통합작전이 가능한 신형 통신 장비로 개선하여 향방예비군의 향방작전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평시 편성률이 매우 낮은 부대가 전시에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의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평시에는 간부예비군을 연간 20일 수준으로 소집하여 자원관리, 부대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투력을 유지하고, 동원 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 중대의 향방 소대장도 간부로 편성하기 위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하여 간부예비군 편성 지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다.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예비전력관리기구³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향방지역대를 대대와 예비군 중대의 중간 지휘조직으로 편성하여 향토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예비군 중대의 자원 수와 작전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통폐합할 것이다. 예비군 중대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인력은 창설되는 동원지원단과 예비군훈련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체제도 현재의 5·7급 직급체계를 4~9급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 예비군 훈련 방법 및 여건 개선 | 국방부는 훈련보류자⁴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훈련대상과 유형별 훈련시간은 <도표 4-11>과 같다.

3 예비전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향방대대를 의미하며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등이 이에 해당함

4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자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 자. 직종 단위로 정하되, 필요 시 자격이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관,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

〈도표 4-11〉 예비군 훈련시간

2014년 기준

구 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	-	-	
		동원미지정자	-	24시간	-	12시간	
	5~6년차	동원지정자	-	-	8시간	6시간	4시간
		동원미지정자	-	-	8시간	12시간	-
	7~8년차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음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	-	-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	
7년차 이상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음					
지원자						6시간	

2014년부터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평가점검표로 훈련 성과를 측정하여 합격 시 조기퇴소와 휴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훈련 우수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퇴소 대상을 30% 까지 확대하고 있다.

별도의 훈련장에서 실시하던 동원훈련을 부대별 임무수행 지역에서 훈련하도록 변경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동원사단 연대별 1개 대대씩 전시와 동일하게 부대를 편성하여 쌍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예비군을 실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연대 단위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전국에 과학화 훈련장 44개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훈련장에는 영상사격 모의훈련과 마일즈(MILES)장비 등 최신 전투훈련 시설을 설치하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순환식 훈련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평일 훈련이 어려운 예비군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훈련받는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제도'⁵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의 3대 불편 사항인 급식, 교통, 훈련장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군이 선호하는 메뉴를 반영하고, 이동식 밥차를 운영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통비는 2012년 4천 원에서 2014년 5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소집 점검 참가자에게도

5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의 사유로 타 지역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비는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18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추가 훈련에 대해서는 현역 간부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넓은 예비군 식당은 신축하고,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예비군 편의시설로 개선하고 있다.

예비군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예산 반영을 통해 예비군 훈련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갈 것이다.

2. 전쟁지속능력 확충

| 조달 혁신 |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각급 부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 국방 전력운영 분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2014년부터 ‘군수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도입 수리부속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단계부터 조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달하지 못한 품목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있다.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 규격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수품의 품목별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군수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⁶을 확대하고, 수요군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택적계약제도’⁷를 도입하고 있다. 수리부속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도액성과계약’⁸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조달 목표를 구체화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정비지원체계 개선 |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원활하게 정비를

6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물품의 제조 등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할 때 전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발주하는 계약제도

7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군수품 구매 시 계약기관은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군은 계약물품 중 물품을 직접 선택하고, 선택된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는 제도

8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납품계약 체결 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과 한도액을 설정한 후,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의 납품을 요구하고, 납품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군의 자산을 통합한 국가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민간의 특화된 정비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군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비효율성이 향상되며 민간 부문은 생산과 정비를 연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양한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첫째, 성과기반군수지원(PBL)⁹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도를 운용한 결과, 수리부속 조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무기체계에 주로 적용하던 제도를 2014년에는 천마탐지추적장치 등 지상·해상장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후 운영·유지 단계에서 적용하던 것을 획득 단계에서부터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FA-50 경공격기에 최초로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도입될 주요 무기체계로까지 확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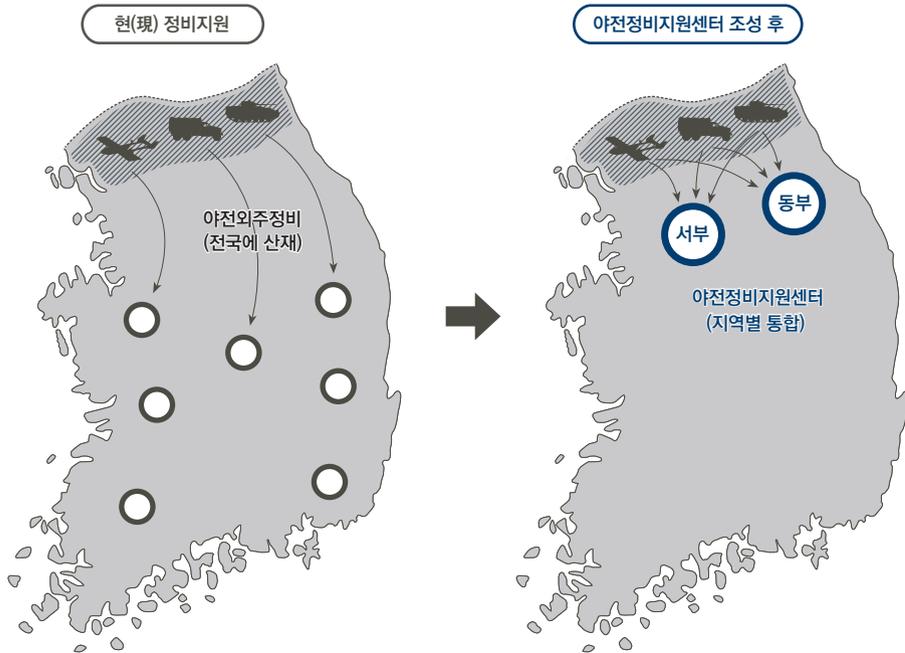
둘째, 주요 전투부대가 밀집된 지역에 민간 정비업체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야전정비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업체를 유치하고 정비 대상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경기 북부 일대에 정비 시설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강원도 일대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전투장비 가동률을 향상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전정비 지원센터 운영개념은 <도표 4-12>와 같다.

셋째, 수리부속의 획득, 운영, 재고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리부속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수리부속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소요 산정 모형을 2016년까지 장비별로 개발 중이다. 개발된 모형은 검증을 통해 2014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부속 재고의 총량은 줄이면서 수요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재고 수준을 다시 설정하고, 수리부속 품목별 이력을 관리하여 중앙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조정·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국가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리부속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9 주요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수지원업체와 수요군 간에 체결하는 장기계약. 수요군은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계약업체는 군수지원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지원결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도표 4-12〉 야전정비 지원센터 운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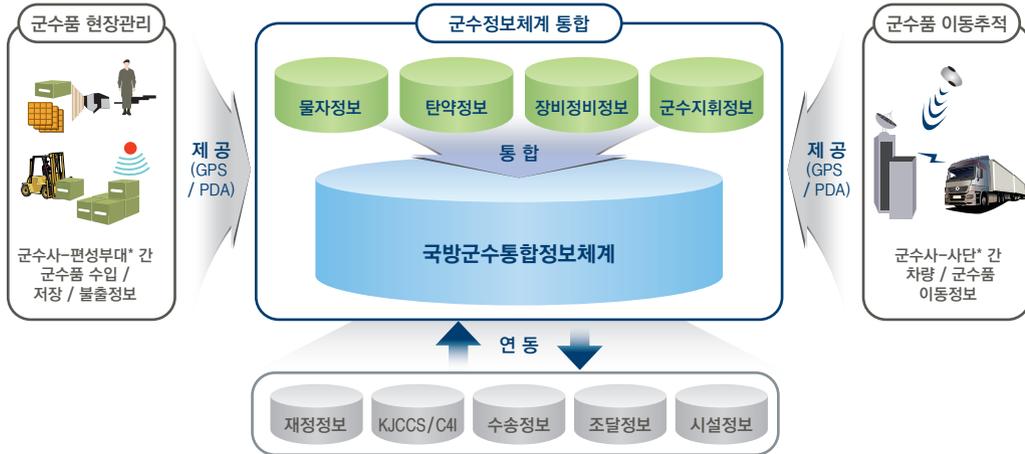
사용자 중심의 군 물류체계 개선 |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투부대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인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보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군수사령부가 각 사단으로 군수품을 직접 보급하고, 사단에서 연대의 군수품 청구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급지원체계를 기존 4~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9~15일에 이르는 사용자 평균 대기기간이 2~7일로 단축될 것이다.

둘째, 장비, 물자, 탄약 등 군수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군수품 현장관리자동화체계’를, 2017년까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2014년에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2군단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군 1개 함대와 공군 1개 비행단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2016년 이후 전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군수품 현장관리자동화체계는 군수품의 수입, 검수, 저장, 출고 등의 과정에 바코드 자동인식과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는 육·해·공군의 장비정비, 국방물자, 국방탄약정보체계 등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국방부 본부부

터 중대급 부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군수통합정보체계에 15대 군수 업무 분야¹⁰를 표준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전·평시 상황 전환 등 다양한 기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 개념도는 <도표 4-13>과 같다.

<도표 4-13> 군수정보체계 개념도



- 편성부대 : 군수품 청구, 집행, 배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부대
- 사용부대(사단급)

셋째, 주공급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공급자제도는 사용부대에서 공급업체에 직접 군수품을 청구하여 납품받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결과 사용부대의 대기기간은 평균 17~25일에서 9일로 단축되었다.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조달받아 사용부대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용부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청구하여 재고가 고갈되거나 시효가 초과되는 방지하였다. 국방부는 주공급자제도의 운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주공급자제도의 대상 범위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향후 국방부는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전쟁지속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주공급자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0 소요, 계획예산, 조달, 자금, 재산, 수불, 수송, 저장, 검사시험, 장비 운영, 정비 관리, 소모 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 목록규격



군수혁신 소개영상

| 전력지원체계 발전 | 전력지원체계¹¹는 군수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담 조직에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과 「국방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발간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지원체계의 소요 기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산악용 오토바이, 항공피복, 조류퇴치시스템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전력지원체계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지원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군수협력 강화 |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의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동맹국 및 우방국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과 호혜적인 군수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분과위원회인 한미군수협력위원회는 1979년 처음 개최되어 2014년 제4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수리부속, 탄약, 유류 지원 등 양국 간의 군수현안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 미 증원부대의 신속한 전개를 지원하여 한반도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전시지원 비용 분담의 책임 등을 규정할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에 필요한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방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과는 1988년 협정을 체결하여 연합훈련이나 합동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유류, 수리부속, 용역 등의 긴급 소요에 대해 상호 군수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몽골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국, 뉴질랜드, 터키, 호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14개 국가와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현황은 <도표 4-14>와 같다.

11 병력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이외의)장비, 물자, 일반시설, 자원 관리,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 제반 요소를 통칭. 2012년 1월 1일부로 '비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용어 변경

〈도표 4-14〉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현황

국가	체결일	제 목
미국	1988. 6.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태국	1991. 11. 4.	대한민국 국방부와 태일랜드 왕국 국방부 간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뉴질랜드	2007. 11. 12.	대한민국 국방부와 뉴질랜드 통합군 간 군수협력에 관한 약정
터키	2008. 5. 27.	대한민국 국방부와 터키공화국 총참모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필리핀	2009. 12. 4.	대한민국 국방부와 필리핀 공화국 국방성 간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스라엘	2010. 7. 15.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총참모부 간 상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2013. 3. 13.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국방부 간 상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호주	2010. 8. 13.	대한민국 국방부와 호주 국방부 간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캐나다	2010. 9. 22.	대한민국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2012. 9. 10.	대한민국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수정 양해각서 제1조
인도네시아	2011. 12. 7.	대한민국 국방부와 인도네시아 국가방위군 간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캄보디아	2012. 8. 7.	대한민국 국방부와 캄보디아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스페인	2012. 12. 10.	대한민국 국방부와 스페인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영국	2012. 12. 14.	대한민국 국방부와 영국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뉴질랜드	2013. 9. 18.	대한민국 국방부와 뉴질랜드 통합군 간 군수협력에 관한 약정
몽골	2013. 12. 16.	대한민국 국방부와 몽골 국방부 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향후에도 탄약, 유류 등 전시 부족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 상호군수 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우방국과의 군수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개발도상 우 방국에 전략적으로 양도하여 국방협력 확대 및 방산수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로까지 양도 대상 국가 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에는 항공기, 공병장비 위주로 양도하였으나 2013년 이후 초계함, 상륙장갑차, 함포 및 함포탄 등 다양한 군수품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4절 국방정보화 발전

국방정보화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장을 가시화하고 정보 공유를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보통신 기반환경과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방호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1. 국방정보화 제도 발전 및 IT 신기술 도입

| 국방정보화 기획문서 및 훈령 정비 | 국방부는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변화하는 안보환경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4년 3월에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개정하였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은 2010년에 제정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에 근거한 국방정보화 분야 최상위 기획문서로서 국방정보화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정보화법에 따라 2012년부터는 매년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국방예산운영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는 당해 연도의 정보화 예산집행계획이다.

국방정보화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2011년 제정한 「국방정보화업무훈령」도 시행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7월에 개정하였다.

향후 국방정보화 법령과 훈령은 국방정책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와 연도별 소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할 예정이다.

| IT 신기술의 적기 도입 추진 | 국방부는 민간의 발전된 IT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국방실험사업’과 ‘범부처 IT 융합 R&D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실험사업은 국방 분야에 민간의 IT 신기술을 적용하고 적합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 군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3~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 4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범부처 IT 융합 R&D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을 군에서 시험평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 '소부대 전술 숙달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등 현재 4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IT 융합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IT 신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에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과 IT 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창조국방 실현을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사물인터넷¹, 클라우드, 빅데이터², 모바일 등의 ICT 신기술을 국방에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정보통신 기반환경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 정보통신 기반환경 고도화 | 국방부는 All-IP 기반³의 실시간 정보 유통을 목표로 국방정보통신 기반환경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1년에 구축된 국방 광대역 통합망은 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전문 운영사가 유지·관리하는 되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망, 작전망 등 용도별로 구축된 유선 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단일화된 체계로 통합해 나갈 것이다.

육·해·공군과 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서버(HW), 응용체계(SW) 등의 국방정보자원을 통합하는 사업이 2014년 12월에 완료되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내진 및 방호기능, 이중화, 강력한 정보 보호 등 생존성이 보장된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평시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하고 무선과 모바일 중심의 정보통신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호 운용성 보장 | 국방정보화는 국방 비전과 목표 구현에 기여하기

1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검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 가능(IoT : Internet of Things)

2 수동적 방식의 처리가 불가능한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

3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망이 통합된 구조를 갖는 망. All-IP망에서는 유선전화망과 국제 이동통신망, 무선망 등 기존의 통신망 모두가 하나의 IP 기반망으로 통합되어, 음성·데이터·멀티미디어 등을 처리하는 패킷망과 인터넷 전화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망구조를 갖게 됨

위해 전장 및 자원 관리 분야의 정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신규 개발 및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전산자원의 통합 환경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장관리정보체계는 기능별 개선 소요를 식별하여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운용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6년 전 전장 요소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국제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성 평가 인증제 시행을 목표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6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상호 운용성 시험평가 수행기관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국방정보기술표준⁴을 매년 최신화하고, 국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이 표준을 준수한 제품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과 구현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평가도구도 2015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3. 국방 사이버 방호 역량 강화

| 사이버 방호 수행체계 발전 | 사이버 위협은 2013년 3월 사이버 테러, 2014년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과 같이 지능화·고도화되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 방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방호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CERT)⁵의 제대별 방호 임무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와 사이버 모의훈련장도 운영하고 있다.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정보 보증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호주 정보통신기술 포럼 등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국방 무기·전력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되며, 체계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5 정보 보호 종합관제체계 등을 갖추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즉각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조직(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향후 네트워크 작전과 연계하여 다중 사이버 방호전략을 발전시키고, IT 신기술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방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 국방부는 전·평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 방역체계 등 단계적·다층적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에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서버와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와 암호화 시스템을 보강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악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신기기를 통한 군사자료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에 특화된 사이버 방호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 방호 기반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보강하고 전군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06
제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14
제3절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120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 평화에 기여	131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 양국의 국방관계는 안보협력을 넘어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원칙에 기초하여 집단적 방위 노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량살상무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 함은 물론 한미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향후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신뢰에 기초하여 한미동맹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 한미동맹 비전 구체화 | 한미동맹은 6·25전쟁 속에서 태동했으며, 1953년 10월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의 혈맹으로서, 군사적 동맹을 넘어 '가치동맹국'으로 지난 60여 년간 '번영의 동반자'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아·태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한미동맹은 이제 안보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군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도 뜻을 같이하였다.

2010년에는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국방협력지침」을 체결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의 60년간의 동맹관계와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하였

다. 지난 60년간의 동맹을 바탕으로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태 국가로서, 양국이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4년 4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력,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연내 개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강화¹ 등 주요 사안에 합의하였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2013년 5월)

Ⅰ 동맹의 협력 수준과 분야 확대 |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한미 국방협력지침’,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등에서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동맹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사이버, 우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해적 퇴치를 포함한 해양안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² 및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정책·전략·교리·훈련 등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리적 협력 범위도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 양국은 재해·재난 복구와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의 협력은 물론 아시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 회의 등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핵 안보 정상회담, 아덴만에서의 연합 대해적 작전 수행, 한미 연합 수색 및 구조훈련, PSI 훈련, 평화유지활동 협력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동맹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1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번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임

2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불법거래를 차단하여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동맹의 존립 목적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국 군은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시, 국지도발, 전면전, 비대칭 도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평시에는 작전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강화하고 있다. 효율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³,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⁴를 포함한 분야별 협의체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통해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미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완성하였다.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도 실질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4월에는 B-2, B-52 전략폭격기, F-22 제5세대 전투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긴급하게 전개되어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였다.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연합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의 숙달과 검증에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매년 상반기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평시에 연합연습, 교리 발전을 통해 전시 임무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미는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 증강계획이 완성되고 그 능력이 검증되면 평택에 위치한

3 다양한 한미 국방 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4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연례적으로 양국 합참에서 개최(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2020년 중반까지 우리 군의 대화력전 전력 증강을 완료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2013년 10월에 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향후 주기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며, 분야별 다양한 국방 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 주한미군 기지 이전 |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과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⁵' 사업과 한강 이북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⁶' 사업이다. 기지 이전을 요청한 쪽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계획 사업은 한국이 부담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은 미국이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003년 5월에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로 시작된 후,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통해 이전 범위가 확대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및 미2사단 기지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지역

5 2004년 10월 26일에 한미가 서명함(YRP : Yongsan Relocation Plan)

6 2001년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의향서를 체결함(LPP : Land Partnership Plan)

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였다. 현재 기지 조성 공사와 도로·전기·가스·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며,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에 의거 이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을 위한 편의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2014년 9월 기준 51개의 미군기지 반환되었으며 29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향후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 토지관리계획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1966년에 한미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⁷)」 제5조에 따르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 측은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도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였다.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양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⁸)」을 1991년에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양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1월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에도 합의하였으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세부 내용은 <도표 5-1>과 같으며, 방위비분담금 배정 현황은 <도표 5-2>와 같다.

7 Status Of Forces Agreement

8 Special Measures Agreement

〈도표 5-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세부 내용

-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투명성 강화(국회 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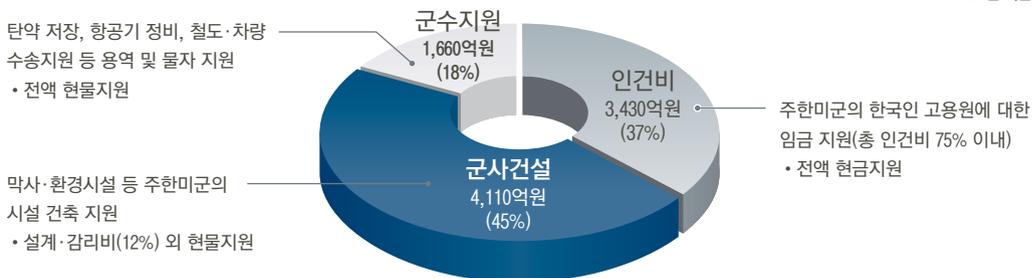
군사건설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도표 5-2〉 방위비분담금 배정 현황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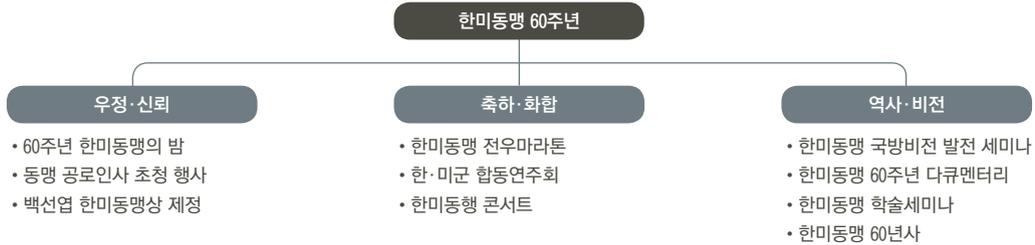
4.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지난 60년을 평가하고, 향후 60년을 조망하기 위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10대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지기 위해 한미동맹 60주년 ‘한미동맹의 밤’ 행사와 ‘동맹 동료인사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였다.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의

화합을 위해 ‘한미동맹 전우마라톤’, ‘한·미군 합동연주회’, ‘한미동맹 콘서트’도 개최하였다. 동맹의 역사를 기록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세미나’와 ‘한미동맹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동맹 60주년 다큐멘터리와 「한미동맹 60년사」를 제작·발간하였다.

〈도표 5-3〉 한미동맹 60주년 10대 기념사업



기념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와 군, 국민들 간 신뢰와 유대감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60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한미 친선 활동 강화 | 한국 정부와 한국군

은 연례적으로 주한미군을 초청하거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혈맹으로서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주한미군 장병을 초청하여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일반 가정에 주한미군을 초청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주한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민간 차원의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친선협회, 한미안보연구소 등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동맹 전우 마라톤대회(2013년 9월)



한미동맹 60주년
다큐멘터리

주한미군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Good Neighbor Program'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기, 부대 초청행사,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언론사 대표와 주한미군 주둔지역 경찰지휘관 등을 초청하여 주한미군 장병과 관련된 사고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에 처음으로 근무하게 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교육과 정기적인 지휘관 정신훈화 시간을 마련하여 주한미군 관련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노력을 한국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와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제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완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한미 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및 제2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하였다.

2000년 이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우리 군의 신장된 능력,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변혁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연합 지휘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16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6월 28일 상설군사위원회(PMC¹)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는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계

1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획(STP)²에 서명하였다. 11월 7일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연속적인 군사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화폐개혁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 2012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역 여러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정치·안보적 유동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변화된 안보상황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증대시켰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전략동맹(SA) 2015」³에 서명하였다.

이후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3년 10월 2일 제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차기 한미안보 협의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하였다.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년 10월)

국방부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참의장 직속으로 ‘신연합방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까지의 추진과제와 추진 일정을 담은 한미 연합 전략문서(STP : Strategic Transition Plan)

3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하는 문서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까지 군사적 조치 사항과 동맹 현안의 발전계획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한미 연합 전략문서(SA 2015 : Strategic Alliance 2015)

〈도표 5-4〉 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일 자	주요 내용
1950. 7. 14.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1954. 11. 17.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부여
1978. 11. 7.	연합사 창설,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
1994. 12. 1.	한국 합참의장으로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2006. 9. 16.	한미 정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007. 2. 23.	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2012. 4. 17.) 합의
2007. 6. 28.	한미, 「전략적 전환계획」 합의
2010. 6. 26.	한미 정상,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
2010. 10. 8.	한미 국방장관, 「전략동맹 2015」 합의
2014. 10. 23.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합의

2. 주요 추진내용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하여 계획, 편성, 능력 및 체계, 연습 및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도표 5-5〉와 같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동맹 현안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연합이행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공동실무단(SAWG⁴), 한미군사위원회(MC⁵),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관련 과제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표 5-5〉 「전략동맹 2015」 연합이행감독체계



4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5 Military Committee

한국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이 주관하는 실무평가회의와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추진과제를 조정·관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분야 | 양국은 한반도 위기 시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할 「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시에 적용할 작전계획은 한미가 합의한 공동기획체계 및 절차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되고 있다.

| 편성 분야 |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맹군사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최초에는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라는 2개의 전구사령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군사적 효율성이 강화된 단일연합지휘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 연합전구사령부 및 연합구성군사령부의 편성과 지휘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능력 및 체계 분야 | 한국군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완전하게 주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군은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⁶)를 개발하고 이를 한미 C4I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연습 및 검증 분야 | 한미 양국은 새로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미래 연합전구사령부 및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군은 한국 합참 주도의 연합연습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신축, 전구급 기능모델 개발, 연습전문가 확보 등 필요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새로운 지휘체계가 실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미 전문가들이 공동 평가할 수 있도록 검증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

| 전략문서 분야 |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등 한미 전략대화체계와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규정하는 문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6 Allied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에 따라 1994년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함에 따라 작성한 「관련약정」⁷과 「전략지시」⁸ 제 2호」를 대체하는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제3호」를 작성하고 있다.

Ⅰ 동맹 현안 분야 | 한미 간 주요 동맹현안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커뮤니케이션⁹ 등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략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협조회의를 통해 주제와 주요 메시지를 최신화하고 분기별 세부 이행계획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2013년 5월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우리 국방부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검토할 것을 미 국방부에 공식 제의하였다.

주요 제의 내용은 기존의 ‘시기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이전의 2012년 4월 17일, 2015년 12월 1일과 같은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적 준비 상태와 안보상황 등을 조건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13년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환 조건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4월,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같은 해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

7 연합방위체제를 규범하는 한미 국방장관의 전략지침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군사위원회에 하달하는 최상위 전략문서

8 「관련약정」을 기초로 전략적인 지침을 지시화한 것으로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전군사령부에 하달하는 전략문서

9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력의 제 요소와 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

사령부¹⁰를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기초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미래사령부(가칭)¹¹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¹² 중 능력 확보가 예상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하고,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미안보협의회의 건의를 기초로 양국 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현재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2015년 12월 1일에 해체될 예정이었던 연합사가 존속하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적정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위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는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에 최우선을 두고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0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

11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

12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구비, 미국은 보안·지속능력 제공 ②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③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제3절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강화

| 한일 국방 교류협력 |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2011년 제15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인도적 재난 구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10월 서울안보대화에서 국방차관대담을 열어 양국 국방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국방차관회담(2014년 10월)

이외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학술교류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제8차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재난 구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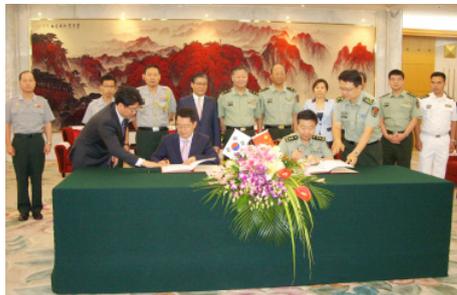
| 한중 국방 교류협력 | 한중 양국¹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다층적·전략적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6월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총참모장과 회담하였다. 합참의장은 중국 합대를 방문하여 양국 해군 간 직통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양국 간 핫라인을 점검하였다.

2013년 8월에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이 대담을 가졌다. 양측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11월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는 청년 장교들의 교류가 양국의 국방과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교육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국방 교류협력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중국 지휘참모대학에도 우리 군의 장교를 파견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양국은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공동성명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양국 군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7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 양해각서 서명(2014년 7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중 청년장교 상호 교류 방문을 실시하였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1 우호협력 관계(1992년), 협력동반자 관계(1998년), 전면적 협력 관계(2000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4년)

이 밖에도 2014년에는 중국군 유해 송환, 국군교향악단의 최초 중국 방문 공연, 합참 전략 부서 간 회의, 체육부대 선수단 상호 방문, 군사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중 양국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한중 양국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중국과의 국방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러 국방협력 | 1990년 수교 이래 한러 양국² 관계는 정치, 경제,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와 9월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2013년 9월 G20 정상회담과 11월 서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러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2년 3월 한러 국방전략대화 이후 양국은 군사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기술 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임무라는 인식 하에 군사기술협력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러 국방차관회담(2013년 10월)

한러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우리 국방부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4년만의 군 고위급 인사 방문으로 군사협력 관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실무급 수준의 합참 본부장급 회의와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대 간 교류와 위탁교육으로 이해의 폭도 넓혀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러시아와의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우의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1994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2004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 국방부는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방산수출 및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9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쓰영 띵 상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4년 3월 한·베트남 국방장관 대담에서는 방산협력 확대, 사이버 안보 및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7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는 국방 교류협력과 이에 부응하는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베트남 군사비밀정보 보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 간 활발하게 진행될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은 2013년 10월 아키노 대통령 방한 시 「한·필리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아라우부대가 파병되었고, 2014년 3월에는 국산 경공격기(FA-50) 12대를 필리핀에 수출하였다.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ASEAN) 회원국과도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대해적활동 협력 등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와는 2013년 7월 제1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의 개최를 통해 외교·안보 협력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었다. 동 회담 이후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동 회담의 격년 개최, 지역 주요국들과의 소다자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14년 4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한·호주 간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을 발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간 연합훈련 및 군 교육교류 활성화,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 협력, 방산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양국은 한반도 및 지역 문제의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국방·방산 분

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25주년을 맞아 2014년 12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남아시아 | 우리 정부는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국방대 대학원생 교환 방문, 위탁교육 파견,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방 및 방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 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 방산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핵에너지, 방위산업, 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고위급 인사교류,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³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20여 년간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과 수교한 이래 국방 분야 협력관계도 크게 발전하였다.

카자흐스탄과는 2010년 9월 국방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11월과 2012년 11월 각각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와 서울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0년 2월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방산 분야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2012년 9월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는 2013년 12월 국방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몽골과는 인사·교육·학술교류를 지속하고 칸퀘스트(Khaan Quest) 훈련⁴에 공동으로 참가

3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11개국(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4 2006년 미국·몽골 양자훈련에서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고 유엔 표준훈련모델 등을 연습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중동 | 중동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자 방산 수출, 재건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수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중동국가들과의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3년 2월 국방부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한·사우디아라비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국방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13년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사령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양국 간 군사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대표단이 방한하여 우리 군 관계자들과 대책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특수전사령부와 방산업체를 방문하였다.

2013년 10월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ADEX)에 리비아 국방차관이 참석하여 주한리비아 무관부 개설을 논의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하였다.

최근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 주요 국가들은 한국과 특수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에 희망하고 있다. 우리도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선진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방 협력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 유럽 |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통 우방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동유럽·북유럽 국가들과도 국방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국방부장관과의 대담에서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5월에는 터키 부총사령관이 방한하여 한국과 터키 간 전통적 우애를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 서울안보대화 등 다양한 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고위급 대담이 이루어졌다. 10월에는 폴란드 대통령 방한 시 국방차관이 동행하여 「한·폴란드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1월에는 헝가리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제3차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버쉬바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인사 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방국인 독일, 영국과는 각각 2014년 2월과 11월에 정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하여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13년 6월에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우리 국방부장관은 북극해 항로 개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9월에는 한·핀란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핀란드 국방차관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차관과 국방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3년 12월 제4차 한·스웨덴 국방정책회의에서는 양국 간 교육교류, 방산군수 양해각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중남미·캐나다 | 중남미 지역과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013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한·콜롬비아 국방정책회의에서 양국 국방차관은 사이버 안보, 지뢰·폭발물 제거, 군수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페루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페루 국방장관 간 대담과 제1차 한·페루 국방정책회의가 열렸다. 페루 국방장관의 방한은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양국 국방장관은 항공기(KT-1) 수출 사업 등 국방 및 방산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1월에 열린 제11차 한·캐나다 국방정책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군사교육·훈련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동 지역의 주요국들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아프리카 | 아프리카는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보츠와나 장·차관과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우리 국방협력단이 보츠와나를 방문하여 국방 및 방산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보츠와나는 2014년 2월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아프리카의 내부 정세와 국제적 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국방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다자안보협력

지역 내 국가들 간 국방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의 안보 관심사이면서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부터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테러, 해적, 대규모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다자안보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2013년부터 북미 지역 최대 다자간 안보협의체인 국제안보포럼(HISF)⁵에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의 무대를 확대하였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아·태 지역 다자 간 안보협의체는 <도표 5-6>과 같다.

<도표 5-6> 국방부가 참여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정부 차원(Track 1)	준정부 차원(Track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및 하위 협의체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 동경 방위포럼 ·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안보대화 · 아시아 안보회의 ·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 · 할리팩스 국제안보회의 · 동북아협력대화

| 서울안보대화 | 국방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아·태 지역 차관급 국방관료들이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을 표어로 매년 대두되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2012년에 비해 6개국이 더 참가하여 2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였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24개 국가 및 3개 국

5 세계 50여 개국, 300여 명의 정부 및 학계 국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2009년 캐나다 할리팩스(Halifax)에서 최초 개최되었음(HISF :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서울안보대화
주제영상

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 아·태 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사이버위킹그룹 회의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아·태 지역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다자안보협력 대화체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로 서울안보대화는 아·태 지역 내 국방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향후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초청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외교·통일 분야를 포함한 국가안보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아시아 안보회의 |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태지역의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아시아 안보회의⁶에 200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열린 제12차·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참가국 대표들에게 설명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범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도 매회 참가하고 있다.

2013년 8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지역 국가 간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문안이 채택되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 국방부는 1996년부터 참여해 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의 해양안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을 태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⁷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합참차장이

6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1회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안보대화체로 아·태 지역과 유럽 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및 국제기구가 참가(Asia Security Summit)

7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매년 개최되는 장관급 국제국방회의로 우리나라는 현재 국방부차관이 참석(JIDD : Jakarta 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의 진화하는 위협과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방부차관이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해양협력 구축’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아·태 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⁸)과 6자회담 참가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⁹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 및 양자관계에 치중해왔던 국방협력은 포괄적인 다자 안보협력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와 운반수단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은 전세계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TT)¹⁰을 채택하였으며, 전략물자¹¹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비확산 관련 협약과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제 비확산 활동 | 우리 정부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¹²)와 공동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아시아 회원국 54개국 230여 명의 화학방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국군의 우수한 화학 방호 선진기술을 전수하였다.

8 일본 방위성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1회 동경에서 개최되는 국장급 다자안보협의체. 역내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상호 신뢰 구축과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추구(TDF : Tokyo Defense Forum)

9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세계분쟁협력연구소 주관으로 동북아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방·외교 관료 및 민간학자가 참가하는 안보대화체(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10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일 규범으로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소형무기, 탄약, 부품 통제가 주요 내용임(ATT : Arms Trade Treaty)

11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및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총칭

12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다자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¹³, 무기거래조약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확산탄과 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오타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CCM¹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협약들의 인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유엔 지뢰제거지원신탁기금 등에도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거래조약 국내 입법화 등 국제규범과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국제 대확산 활동 |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미 5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식 연습과 상황조치 연습, 고위급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 연습을 통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 통합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합 생물방어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하여 2014년 9월 현재 10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압류 처분에 대해 토의하고 해상차단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UAE, 2014년에는 미국이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3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다자 수출통제체제

14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 평화에 기여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원조를 주는 나라'이자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국으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은 2014년 9월 기준 약 1,400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등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¹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²)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유엔임무단은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정전 감시와 재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고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636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 중이다. 참여 현황은 <도표 5-7>과 같다.

| 레바논 동명부대³ | 1975년 레바논에서 기독교와 무슬림 세력 간에 발생한 내전 수습을 명분으로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진주하였으나 내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유엔은 1978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⁴)을 설치하고 레

1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 비교

구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주체	유엔이 직접 주도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	파견국 주도
지휘통제	유엔 사무총장 임명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파견국 군지휘관
소요경비	유엔에서 경비보전	파견국 부담	파견국 부담

2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3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성왕(주몽)의 이름을 딴 것으로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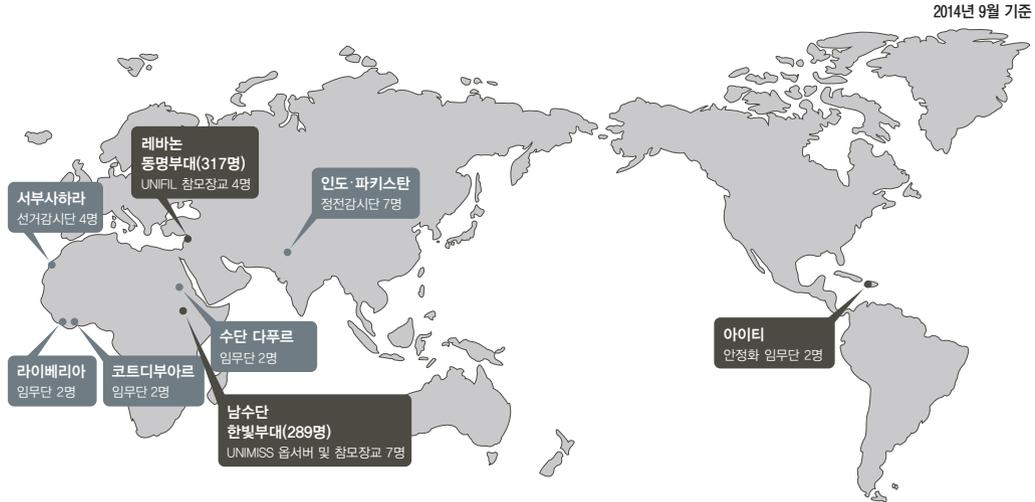
4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국군 해외파병
홍보영상

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도표 5-7〉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2006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2006년 8월 평화유지군의 규모를 2,000명에서 1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여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명부대는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피스웨이브⁵(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고정초소 감시활동

5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개보수, 도로 신설 및 개선, 주민 대상 의료지원 활동 등

〈도표 5-8〉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14년 9월 기준

작전활동	민군작전	군사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지역 감시 정찰 : 26,444회 · 레바논 군과 연합정찰 : 4,47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73,941명 · 가족 진료 : 16,872두 · 컴퓨터·한글·태권도·재봉 교실 운영 :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 188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참가국과 교류 활동(463회)

남수단 한빛부대⁶ |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후 수단에서는 1955년부터 정치·종교적 이유로 남북 간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2013년 1월 280여 명 규모의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⁷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도표 5-9〉와 같다.



도로보수 공사

〈도표 5-9〉 한빛부대 주요 활동

2014년 9월 기준

재건지원작전	민군작전	난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공항 주기장 확장(410m×110m) · 보르공항 활주로 보수공사(50m×15m, 2개소) · 보르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 신설(70m×70m) · 보르시 도로 보수공사(32km) · 보르시 쓰레기 매립장, 오수 처리장 건설 (50m×50m,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 3,700여 명 · 백나일강 차수벽 공사 : 17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보호소 신설 : 500m×500m · 총상환자 치료 : 819명 · 의료, 방역, 급수, 쓰레기 처리 지원

6 남수단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임

7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임



한빛부대 홍보영상

|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사하라, 아이티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3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우리 육군 장성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에 진출하여 2014년 6월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화와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310명을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인근 해역에 군함과 항공기 파견을 결정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였다.

주요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2014년 9월 기준 301명이다.



리비아 재외국민 구출작전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에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우리 해군 제독이 바레인 소재 연합해군사 예하 다국적 기동부대인 CTF-151을 지휘하였는데 우리 해군의 CTF-151 사령관 임무 수행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 해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활동은 <도표 5-11>과 같다.

<도표 5-11>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14년 9월 기준

호송 동행		안전항해 지원		해양안보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418척	1,507척	5,905척	2,594척	238회, 486일	21회, 31척

|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⁸ |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탈레반의 무차별적인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유엔은 국제안보지원군을 설치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들에게도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0월 우리나라 지방재건팀 및 방호부대 파견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

8 오쉬노(Ashena)는 아프가니스탄 다리어로 ‘친구, 동료’를 의미

년 2월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0년 7월 우리나라 지방재건팀이 안전하게 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50여 명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을 파르완 주에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나라 지방재건팀 주둔지와 지방재건팀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지방재건팀은 2010년 파견 이래 보건 의료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현지 주민들은 우리 지방재건팀을 ‘아프가니스탄의 친구인 한국인들(Korean brothers)’이라 부르며, 모범적인 재건 활동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오쉬노부대는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통해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완벽하게 보호하였다.



지방재건팀 경호작전

오쉬노부대는 지방재건팀의 활동이 201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2014년 6월 말 지방재건팀과 함께 전원 철수하였다. 오쉬노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2> 오쉬노부대 주요 활동

2014년 6월 기준, 2014년 6월 말 철수

작전활동	민군작전	군사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건팀 영외활동 보장을 위한 호송 및 정찰 활동 : 1,812회 바그람기지(지방재건팀 주둔지) 및 카불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 주변 마을 초청행사 : 10개 마을 영외작전간 현지 아동 물품 공여 : 미니카, 신발 등 파르완 주 청소년 축구팀 자매결연 및 물품 지원 : 유니폼 등 15종 305점 한국병원 불치병 입원환자 성금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군, 아프가니스탄군 교류활동 : 상호 방문(40회), 전술도의(27회) 한미 연합 통합화력 훈련 : 월 1~2회

|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장교 | 우리 군은 부대 단위의 다국적군 파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레인의 연합해군사,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 미국 중부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연합해군사 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 계획 수립 및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등이다.

3. 국방협력활동

국방협력활동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비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다. 이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병이다. 2014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447명이 국방협력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협력활동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UAE 아크부대⁹ |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 체계 및 선진화된 국방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UAE군은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여 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 15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아부다비 주 지역에 파견하였다.



UAE군과의 연합고공강하훈련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과 연합 연습·훈련을 실시

9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으로, UAE 국민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

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아크부대는 대테러사격술, 침투기술, 체력 단련 등 UAE군의 능력이 부족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UAE군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중동지역 연합특수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특수전 훈련을 포함하여 육·해·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도표 5-14>와 같다.

<도표 5-14> 아크부대 주요 활동

2014년 9월 기준

UAE군 능력 향상	우리군 능력 향상	국방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군의 첨단 시설 및 장비 활용 • 약조건(50℃ 이상 고온, 사막)에서의 생존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해·공군의 양성·보수교육 등 교육훈련체계 전파 • 육·해·공군의 교육과정에 UAE 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확대 • 의료협력을 통해 UAE군 환자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지역 국방외교 허브 구축

| 필리핀 아라우부대¹⁰ |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의 많은 지역이 폐허로 변하고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3년 12월 공병대와 의무대 등 530여 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을 파견하였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아라우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거나 다국적군이 아닌 재해 당사국 요청에 의해 파견된 최초의 파병부대이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포함된 최초의 파병부대이기도 하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각한 타클로반 일대에서 피해지역 정리와 공공시설 복구지원, 의료지원과

10 아라우(Araw)는 타갈로그어로 '태양'이라는 뜻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의미



아크부대 홍보영상

방역활동, 증장비 직업학교 운영, 친한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하였으며, 아라우부대의 파병은 이러한 필리핀에 대한 ‘보은의 파병’이기도 하다.

아라우부대는 ‘피의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는 구호 아래 복구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는 ‘진심을 다해 도와주는 나라’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재해 복구 활동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라우부대는 지역 기능 조기 정상화 및 재해 복구 지원 등 주어진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한다. 주요 활동은 <도표 5-15>와 같다.

<도표 5-15> 아라우부대 주요 활동

2014년 9월 기준

공공시설 복구	의료지원	직업학교 운영	친한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28개소, 관공서 13개소, 병원/사회복지시설 6개소, 참전용사 주택 4개소 · 잔해물 제거 19,600톤, 전도된 전신주 254개 처리, 붕괴 위험시설 철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만여 명(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 등) 진료, 방역 500여 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수 379명 수료 (굴삭기, 도자, 로우더, 지게차, 크레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급식 46,000여 명 · 한국어 교실(초교, 고교, 성인반) 운영 등

■ 말레이시아 실종항공기 해상탐색지원 | 2014년 3월 239명의 승객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우방국에 항공기 잔해 탐색을 요청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등 10여 개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해군 P-3와 공군 C-130 각각 1대와 39명으로 편성된 ‘말레이시아 실종항공기 해상탐색지원단대’를 3월 15일 말레이시아로 파견하였다.

이후 실종항공기가 호주 남서쪽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잔해 탐색작전은 이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우리 군은 호주가 주도한 작전에 참여하여 총 21회 196시간 동안 해상탐색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5월 2일 국내로 복귀하였다.

비록 해상탐색지원 활동에서 실종항공기의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다국적 연합탐색작전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 |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의 시급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해 지역에 민·군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 의료인력

을 파견하였으며 파견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이다. 군의관 2명, 간호장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군 의료인력을 3회에 걸쳐 총 15명을 파견할 것이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기반 확충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자안보회의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협력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6월에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즉시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천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천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¹¹)’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부대이다.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은 <도표 5-16>과 같으며, 파견 인원은 <도표 5-17>과 같다.

11 전체 또는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도표 5-16〉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



*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헌병, 경비부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무인항공기·헬기부대 등

〈도표 5-17〉 상비부대 파견 인원

2010 ~ 2014년 9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계
1,667명(11개진)	320명(8개진)	492명(8개진)	2,479명

PKO센터 기능 강화 |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교육전담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0년 1월 PKO센터를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변경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PKO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외파견 경찰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의 임무 종료 후에는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PKO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¹²)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PKO센터는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PKO센터의 교육 인원은 〈도표 5-18〉와 같다.

〈도표 5-18〉 PKO센터 교육 인원

2014년 9월 기준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기 타	계
5개 과정 1,398명	3개 과정 59명	3개 과정 798명	2,255명

12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PKO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 한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PKO 분과¹³의 의장국 임무를 수행한다.

2014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PKO 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의 현안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체계를 소개하였으며,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PKO 분과 의장국으로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존의 파병활동과 더불어 다자안보회의체를 통한 우리나라의 역할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¹³ 국제평화유지활동, 대테러, 해양안보, 군 의료,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뢰 제거 등 6개 분과로, 아세안 1개국과 Plus 1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제1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146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51



육군 야간 철책 경계

제1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군비통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함은 물론 통일 전문인력 양성 등 통일에도 대비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교류협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남북 간 신뢰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3월에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후속조치로 판문점 직통전화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였다. 4월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긴장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갔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5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특사 방문을 계기로 유화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영상

단 폐쇄 이후 7차례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9월 6일부터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재개통하고,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14년에도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였다.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 2월 12일과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 6월 30일에는 국방위 중대제안 내용을 반복하는 국방위 특별제안, 7월 7일 정부 성명 등 파상적 평화공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 중이던 2월 2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2월부터 계속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270여 발을 발사하고, 소형 무인기 침투, 4차 핵실험 위협, 한미 연합연습 중단 요구 등 평화공세와 위협과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병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 등 고위대표단을 파견하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오찬 회담을 갖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불법 침범함에 따라 남북 합정 간 교전상황을 유발하였다. 10월 10일에는 연천 지역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가함으로써 일부 총탄이 우리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개최하고자 수정 제의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은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북한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각각 참석하였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다음 날인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회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2014년 10월)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공개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였다. 또한 10월 18일과 19일에는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함은 물론 오히려 우리 측을 향해 총격도발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결국,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 등을 빌미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대남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여건 조성 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남북 교류협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¹ 조성 지원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는 각종 군사시설, 중화기, 지뢰 등이 밀집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비무장지대 내의 일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남북한 주민과 세계에 개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8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통해서도 동 구상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15일 광복 68주년 기념 경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 제69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냉전과 갈등의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담조직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기획단'을 통일부에 설치하였다. 외교·군사·환

1 최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2014. 9. 24)에서 생태 개념이 포함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명칭 변경

경·문화 등 제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특별팀도 구성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DMZ 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과거 사례를 준용하여 군사적 안정성에 우선권을 두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작전계획 변경이나 군사시설 조정 등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안정성 보장 대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북 협상, 군사적 안정성 보장 대책 등 군사 분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군비통제 정책 발전 및 통일 대비 군사적 기반 구축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군비 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 간에는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군비통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합의이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주요 국제군비통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국익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비군사 분야를 상호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여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반도 군비통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안보대화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비통제검증단’을 중심으로 군비통제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검증 역량을 전수받기 위해 한미 연합사찰훈련을 실시하고 미국, 독일 등의 군비통제 검증기관과도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사회담 전문가 양성, 모의회담 등을 통해 군사회담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 군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범

국가적 통일준비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통일 준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도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국방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하였으며,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공동 유해 발굴도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에 따라 대폭 축소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개성공단 운영,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우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 남북 간의 직접 통행은 육·해·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5·24 조치 이후 현재는 육로통행만 이루어지고 있다. 육로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철도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2013년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4. 8. ~ 9. 16.)을 제외하고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2014년 2월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과 같은 통행 수요가 있을 경우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군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통행계획을 유엔군사령부 및 북한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남북통행에 대한 호송과 경계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이 주요 내용

| 남북 군 통신선 운영 | 남과 북은 동·서해지구 남북 군 상황실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을 통해 통행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군사당국 간 전화통지문을 주고받고 있다. 비록 북한에 의해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과 개통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남북 간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한 2011년 5월 31일 이후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만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 27일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마저 차단하고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은 9월 16일부터 재가동되었다. 국방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북한과 협의를 통해 9월 6일부터 군 통신선을 재개통하였다.

북한은 안정적인 통신 보장을 이유로 자재와 장비 제공을 요청하였다. 우리 측은 2014년 1월과 2월 각각 2회에 걸쳐 팩스, 차량, 유류 등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남북 간 군 통신 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포로 상호 교환 직후부터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2007년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함에 따라 국군포로 20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2014

년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확인한 국군포로는 41명에 달하며, 이 중 17명이 남쪽 가족과 재회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조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군포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며 그 가족은 430여 명에 이른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송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귀환 국군포로 현황은 <도표 6-1>과 같다.

<도표 6-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14년 9월 기준, 단위: 명

연도	총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2014년
인원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도 귀환 국군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급여, 주거지원금, 연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은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대우 이외에 ‘국군포로 가족’으로도 등록하여 세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그간의 법률 시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주거지원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귀환포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여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자력에 의한 국군포로 유해 송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귀환 국군포로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귀환 국군포로·가족 초청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생사 확인과 상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탈북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해 제3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 역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중국군 유해 송환 및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국방부는 6·25 전사자 발굴 과정에서 함께 발굴된 북한군, 중국군 유해를 경기도 파주에 조성된 북한군·중국군 묘지에 별도로 매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중국군 유해 43구를 중국 측에 송환하였으나,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 무실화를 목적으로 유해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군 유해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으로 송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2013년 11월 중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한중 양국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중국군 유해를 2014년 4월 5일 중국 청명절 이전에 송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연인원 14,000여 명을 투입하여 매장된 유해를 개도, 건조, 세척하는 등 송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 437구에 대한 인도식이 거행되었다. 향후 추가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도 이번 절차를 준용하여 매년 중국에 송환할 예정이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한중 양국 간 과거 상흔을 치유하고 도약과 발전을 이룰 새로운 이정표이며,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남북 간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중국군 유해 인도식(2014년 3월)



중국군 유해 송환
홍보영상

2007년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아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제7장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제1절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58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쟁력 강화 165
제3절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69



FA-50 전력화 기념식(2014년 10월)

제1절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국방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와 민간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1. 적정 국방비 확보

| 국방비 배분 추이 |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국방환경의 변화 등 국방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과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국방비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2.38%, 정부재정 대비 14.4% 수준이다. 그 추이는 <도표 7-1>과 같다.

<도표 7-1> 국내총생산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 북한의 지속적인 국지도발, 동북아 국가 간 영유권 다툼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의 위협에 더하여 소형무인기 침투, 사이버 공격 강화 등 새로운 위협의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국방비 비율은 세계 평균인 2.11% 보다는 높지만 미국, 러시

아, 이스라엘 등 주요 분쟁국 또는 대치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요 분쟁국·대치국과 우리나라 주변국의 국방비 현황은 <도표 7-2>와 같다.

<도표 7-2> 주요 분쟁국·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013년 기준

그루지아	대한민국	러시아	레바논	미국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	파키스탄	세계 평균
2.29	2.42	3.08	4.15	3.7	4.13	3.57	5.98	2.47	2.11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4」(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 2.)

다양한 안보 위협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적정 국방비 확보의 기대 효과 | 적정 수준의 국방비 투자는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국방비는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방비 10억 원의 지출은 16.8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7.8억 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며, 12.3명의 취업을 유발시키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도표 7-3>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2010년 기준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 평균	국방
생산유발효과	21.0억 원	16.6억 원	18.8억 원	16.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억 원	8.2억 원	6.9억 원	7.8억 원
취업유발효과	9.4명	18.3명	13.9명	12.3명

* 국방비 10억 원 지출 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 출처 :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한국국방연구원, 2014)

방산수출은 2013년에 최초로 연간 34억 달러를 달성하여 누적 100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수출품목도 탄약, 소화기에서 함정, 항공기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방산수출은 국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대외적으로 군사교류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 첨단기술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국방부는 이처럼 국방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 2014년 국방예산 | 2014년 국방예산은 2013년 대비 3.5% 증가한 35조 7,056억 원으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장비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 규모와 배분 현황은 <도표 7-4>와 같다.

<도표 7-4> 2014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 규모와 배분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B-A)	
			증감	증가율
국방비 계	34조 4,970	35조 7,056	1조 2,086	3.5
전력 운영비	24조 3,221	25조 1,960	8,739	3.6
병력 운영비	14조 2,847	14조 8,409	5,562	3.9
전력 유지비	10조 374	10조 3,551	3,177	3.2
방위력개선비	10조 1,749	10조 5,096	3,347	3.3

국방비의 70%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2013년 대비 3.6% 증가한 25조 1,96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작전·경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신형 방탄헬멧, 낙하산, 기능성 방한피복 확보 및 노후 침낭 교체 등 야전부대 전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군수지원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장비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를 반영하고 정비고, 탄약고, 무기고 등 노후한 군수지원시설을 현대화하여 전투지원 여건도 개선할 것이다. 실제 전장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할 수 있는 종합훈련장을 확보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2014년 국방예산
홍보영상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고, 예비군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는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것이다.

보람있는 군 복무를 위해 장병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소요를 반영하였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한다는 정책에 따라 병 봉급을 15% 인상하였으며,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채용을 확대하여 장병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응급처치 물자를 개선하는 등 국방 의료지원체계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구형 생활관을 개보수하고,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중점 반영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2013년 대비 3.3% 증가한 10조 5,09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21개 사업에 1조 1,771억 원을 편성하였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등 27개 사업에 1조 995억 원을 편성하였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차기 다련장·호위함·전투기(F-X) 사업 등에는 7조 3,458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처럼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에도 보다 긴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강화, 장병 인권 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2015 ~ 2019 국방중기계획 | ‘2015 ~ 2019 국방중기계획’의 총 재원 규모는 222.9조 원으로 전력운영비는 5.6%, 방위력개선비는 10.6%, 전체 국방비는 중기 기간 중 평균 7.2%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전력운영비는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장병 복지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

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실질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간부 증원 소요를 우선 반영하였다. 장병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필수 물자와 장비를 보강하였고, GP·GOP 등 접적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작전·경계시설을 강화하였다. 예비군이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고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병 봉급 인상 및 병영문화시설 확충,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 등을 통하여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과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

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구현 등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배치하는 등 접적지역 전면전 능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능력을 확충하고, 기동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며, 야전부대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상교통로 보호능력 및 상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해상전력을 확보하고, 공중우세 달성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공중전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내 민간 참여분야를 확대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국방중기재원 규모는 <도표 7-5>와 같다.

<도표 7-5> 국방중기재원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2014년	대상기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방비 (증가율)	35.7 (3.5)	38.5 (7.9)	41.5 (7.8)	44.6 (7.4)	47.6 (6.7)	50.6 (6.3)	222.9 (7.2)
전력 운영비 (증가율)	25.2 (3.6)	26.8 (6.3)	28.4 (6.1)	30.1 (5.9)	31.6 (5.1)	33.2 (4.9)	150.1 (5.6)
(점유율)	(70.6)	(69.5)	(68.4)	(67.4)	(66.4)	(65.6)	(67.3)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10.5 (3.3)	11.7 (11.8)	13.1 (11.5)	14.5 (10.9)	16 (10)	17.4 (9)	72.8 (10.6)
(점유율)	(29.4)	(30.5)	(31.6)	(32.6)	(33.6)	(34.4)	(32.7)

3. 국방경영 효율화

|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운영 | 군 내부에 효율적인 선진 경영기법을 확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회의를 통해 예산,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상기관의 범위도 육·해·공군에서 국직부대와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전

투준비태세와 국방정책기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비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전투준비태세와 국방정책기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 국방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적·집행적 업무 성격의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군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여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조직 운영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009년 시범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정비·보급·의료·인쇄 분야의 18개 기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생산성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국군인쇄장은 2009년에 지정된 이후 연간 생산량이 56.8% 향상되었으며, 국군수도병원은 수술 전 대기기간을 76.1%까지 단축하는 등 장병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대외인증 19건, 각종 수상 62회, 특히 34건 등 대외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4.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병력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군수, 시설, 복지 등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정된 병역자원은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원의 활용이 중장기적 인력·재원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민간개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간개방 기본계획(2014~2018)」은 인력, 자본, 민간경영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전투 분야의 국방예산 2,000억 원을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기타 국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장비가동률 향상, 급식의 질 개선, 교육의 전문성 향상 등 국방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하고자 한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부터 일부 부대는 세탁, 폐품 수집, 각종 물자 수리 등 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비전투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부대의 현역을 감축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전군 보

급지원부대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ESCO, WASCO 사업’¹ 등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수, 시설,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한정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도표 7-6〉 민간자원 활용방법과 「민간개방 기본계획(2014 ~ 2018)」 세부과제

구분	세부과제
민간 위탁	외주정비 확대, 차량 임차제도 도입, 물자수리·세탁·폐품처리 위탁 등
경영기법 활용	주공급자제도 확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등
민간자본 유치	가스·전기·수도시설 친환경 개선사업, 야전정비지원센터 유치 등
민간인력 활용	민간조리원 운영 확대, 군 교육기관 민간인력 채용 확대 등

1 에너지, 물 절약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군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절감된 공공요금의 일부는 업체에 상환해주는 사업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70여 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됨(ESCO : Energy Service COmpany, WASCO : Water Service COmpany)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쟁력 강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국방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국방부는 2014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하고 소요 검증과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사업관리체계, 전문성, 사업정보 관리, 견제·감시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분야를 점검하여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 방위사업법 개정 |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기능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집행 기능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도록 「방위사업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판정을 담당하게 된다. 합참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등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러한 기관 간 기능 조정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기관별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7-7〉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의 역할 변화



| 소요 검증 기능 강화 | 국방부는 합참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 전력 소요에 대해 가용 재원, 국방정책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소요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된 '전력소요검증위원회'¹에서 소요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소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요 검증 추진체계는 <도표 7-8>과 같다. 전력소요검증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 9월 까지 총 56건의 소요를 심사하여 그중 29건에 대해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등의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소요 검증을 위해 검증 방법을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7-8> 소요 검증 추진체계



| 객관적·과학적 분석평가 수행 |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문적·심층적 분석활동이다.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획득, 운영, 유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총 231건의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방부는 분석평가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력화평가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야전운용시험² 절차를 제도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야전운용시험 제도가 정착되면 군의 소요에 맞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무기체계의 완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평가 결과물을 후속 단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1 전력소요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구로 전력소요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위원장(국방부차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초도 생산·구매품을 대상으로 소요 군이 먼저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야전 운용 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후속 양산 및 구매를 결정



함대지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발사



블랙이글, 하늘길
5,400km를 열다



블랙이글
싱가포르 에어쇼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민 신뢰 제고

최근 일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비리와 사업 관리 부실의 문제가 언론과 국회를 통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사업관리 체계, 업무 수행의 전문성, 사업정보의 관리, 견제 및 감시 시스템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비리 및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 원가 부정과 사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군이 요구하는 최적 성능의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가 위주의 낙찰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무기체계 소요기획, 획득방법, 시험평가 등 단계별 검증시스템을 보강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능력 중심의 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 무기체계 획득과정은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위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 획득 분야 인력 간 인사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보직경로제를 적용하는 등 업무 수행 전반에서 균형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사업정보의 공개 확대 | 기밀자료가 많은 방위사업의 특성상 소수의 관계자만이 사업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음성적인 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군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는 보호하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계약 정보의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에 필요한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단계별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개방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견제·감시 시스템 및 처벌 강화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퇴직직원의 불법 취업을 근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뇌물·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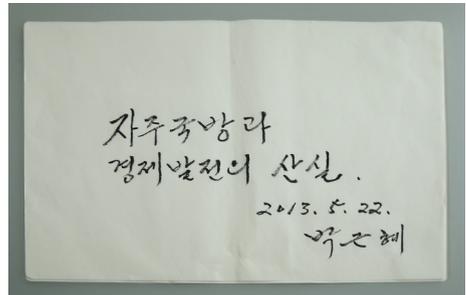
우리 군은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활성화하여 방위력을 증강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기술의 개발, 민·군 기술교류 등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민간 역량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국방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전망이다.

1.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 창조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국방연구개발 |

국방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과 '선(先) 기술개발 후(後) 체계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을 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 무인·로봇 분야 등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미래전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인 연구과제도 선정하여 수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2013년 5월)

| 국방연구개발비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 2014년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영상



민군기술협력
홍보 애니메이션



FA-50 이라크
수출 홍보영상

는 약 6.5% 수준이다. 국가안보 및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을 2018년까지 8.5%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15% 수준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 투자비의 비중도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1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며,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국방연구개발체계의 선진화 | 우리 군은 국방연구개발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합참의 소요 기획과 국내외 기술 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되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학연 등으로부터도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핵심기술 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여 연구 역량을 전략무기와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간업체가 일반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방연구개발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비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국방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사전·중간·사후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업체가 과제의 난이도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창의·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민·군 기술협력 강화 | 2013년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 개정 이후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 부처가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진 국방기술을 축적해온 군과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민간의 기술 협력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군은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첨단 민간기술을 국방에 적극적으로 적용(spin on)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개최하여

민·군 기술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방기술거래장터¹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이전(spin off)하는 등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의 우수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군 기술협력이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공동 기술개발 확대 |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첨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6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 도입, 기술 수출, 공동개발 등의 형태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공동 기술개발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3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5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국제 공동 기술개발은 연구개발 추진 시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어 앞으로도 협력 대상 국가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방위산업 활성화

| 방위산업 참여 기회 확대 |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²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방산 분야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신규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 부처, 민간업체, 연구기관에서 방산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등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여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2014년 5월)

1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 위한 온라인 거래 장터(<http://dtims.dtaq.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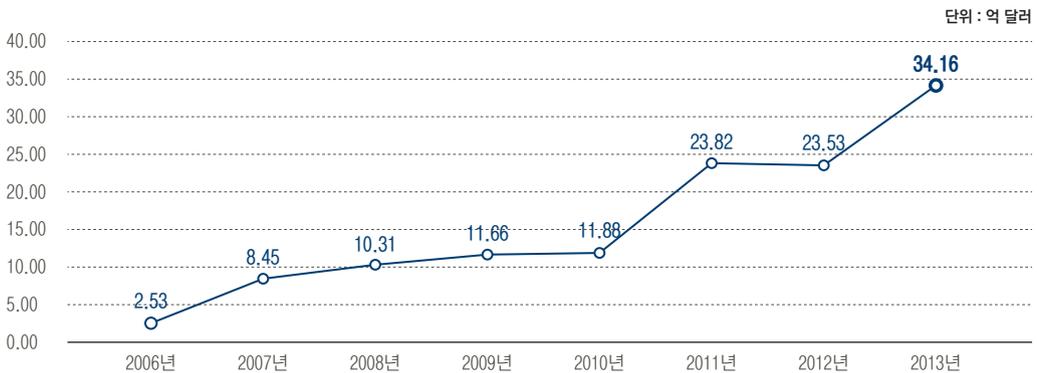
2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 국방부는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생산·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SW) 등 전략 부문과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 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컨설팅 지원, 수출 마케팅전략 수립을 포함하는 맞춤형 패키지 정책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수출정책 추진 |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매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군사교류 및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방산협력을 모색하고, 방산 선진국은 대응구매·공동개발 중심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방위산업 수출은 계약액 기준 34.16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6년 이후 방산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은 <도표 7-9>와 같다.

<도표 7-9> 방위산업 수출 실적



〈도표 7-10〉 방산수출 상위 5개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136	터키	383	터키	427	미국	398	미국	486	인도네시아	1,500	미국	737	이라크	1,129
터키	57	미국	209	미국	331	이라크	320	말레이시아	367	미국	640	영국	723	미국	1,053
인도네시아	11	파키스탄	100	이집트	101	인도네시아	229	터키	75	터키	56	페루	209	태국	485
UAE	10	인도네시아	31	인도네시아	50	터키	43	인도네시아	51	이스라엘	28	터키	135	노르웨이	230
말레이시아	7	시리아	26	콜롬비아	24	필리핀	27	리비아	50	태국	16	콜롬비아	91	페루	170

유럽과 남미 등으로 수출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방산수출국가는 2006년 47개국에서 2014년 8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방산수출 기업도 2006년 47개에서 2013년에는 11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탄약, 소화기류를 주로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수출품목도 다양해져 수출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수출품목을 육성하며,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T-50i 수출 비행(2013년 9월)

제8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제1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176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81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8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1



제1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국방부는 반복되는 병영 내 악성사고, 구타·가혹행위 등의 악습, 군 기강 해이 등 식별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영문화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병 인권 보장 및 인성 함양, 초급간부의 리더십 강화, 병영생활의 폐쇄성 극복 및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다.

1. 병영문화 혁신 개념

| 비전과 목표 | 병영문화 혁신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신뢰’는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은폐·엄폐되지 않으며, 부모와 가족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열린 병영’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병영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병영의 모습을 의미한다.

| 추진 중점 |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②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③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④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⑤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다섯 가지 중점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군 내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영부조리 척결 및 사고 예방,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병력·부대관리 시스템이 발전되고 복무



열린 병영문화
정착 홍보영상



국방헬프콜
홍보영상

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 마련, 군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개방과 소통 확대 등의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 개선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국가 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병영생활과 인권 존중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2. 병영문화 진단

| 가치관 및 의식 | 민주주의의 발전, 학력 수준의 향상, 전문기술인력의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1990년대 이후 군의 병영문화 개선 노력은 병영 내 인권의식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계급과 권위 중심의 지휘’는 ‘술선수범과 인격 존중의 지휘통솔, 소통·공감·자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절대복종’을 강요하던 문화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시와 명령’의 병영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전 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무시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잔존해 왔으며, 유사 악성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군 기강 해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법·제도 및 규범 | 군은 2005년 이후 인권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병영문화 개선과제에 장병 인권 보장을 포함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병영문화 개선 방향을 명시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군의 수사·조사·징계 등도 일반 사법절차와 같이 행정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따라 법률로 보장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대 운영이 지휘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군내·외에 확산되고 있다.

| 행동과 생활양식 |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과목·과제가 증가하고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 발전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권·인성 및 사회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부대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명

성이 보다 더 요구되고 있으며 복무기간 단축, 높은 병력교체 순환율, 왕따·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병사들의 입대로 간부들의 병력관리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생활기반 및 환경 | 병영의 개념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군과 사회의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군 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응급환자후송체계 및 장비·능력의 조기 확충이 긴요한 실정이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자기개발을 통해 전역 후 미래 준비가 가능하도록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 보장도 필요하다.

3. 병영문화 혁신 방안

|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 심리검사 도구 개선, 심리검사 인력 증원,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군 의무복무 대상자 중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활동

‘관계유형검사’ 도구¹ 개발, 병영상담관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대 등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대대급 주둔지에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병영 내 안전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며, 격오지 및 병영시설을 가능한 대대급 주둔지로 통합하여 지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다. 격오지 부대 환자 발생 시 진료접근성 강화 및 응급의료인력과 장비·물자 확충 등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모든 부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 여건과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1 기존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집단 내 타인에 의한 평가를 통해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고, 복무 부적응 수준 정도와 집단 내 개인 간 상호작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 도구

병영'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 및 SNS 구축, 수신전용 공용휴대폰 운용, 영상공중전화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부모·부대 간 소통 통로를 구축할 것이다.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장병들의 인성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국방재능기부은행' 설립,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것이다.

|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 인권은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학교·부대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격오지 병영도서관 설립 등 장병들이 인간존엄 중심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군인복무기본



군 인권교육(2014년 8월)

법(가칭)」과 '영내 폭행죄' 신설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장병인권 보장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법무장교 외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확충하여 인권 및 군법교육을 통한 장병 인권 의식을 제고하며, 사고 발생 관련 제대별 지휘·감독 책임의 한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처리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신도 일소해 나갈 것이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 병사들이 주인의식과 능력을 기초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책임에 기초한 병영생활관 운영 개념과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장병 상호 간 존중하는 언어문화를 정착하여 언어폭력을 차단할 것이다. 노후·협소한 GOP소초 생활관을 조속히 현대화하고, 예산 소요를 고려하여 부대관리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용역으로 전환할 것이다. 병 휴가 자율선택제, GOP 경계부대 휴일면회제도, 일반부대 평일면회제도 시행 등으로 장병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와의 단절감·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 군의 존재목적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의한 엄중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간부 리더십 향상과 술선수법을 통해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초임간부 획득을 대폭 축소하고

학·군 협약대학의 경쟁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대량 획득으로 간부 자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임관 적·부 심사 등 현역복무 부적격자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부적격자를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정착시킬 것이다. 양성·보수교육에서 ‘군대윤리’를 핵심과목으로 편성하여 올바른 군인 가치관을 확립할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기 위해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병사 특기부여제도를 도입하며,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상하 신뢰하고 단결하여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도록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 화합·단결 저해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2013년에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군인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의식주 등 기초복지를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함은 물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군인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군인이 조국 수호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2017)」¹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09년에 수립된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 보장, 가족복지 등 7개 영역 7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봉급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군인의 보수체계도 계급, 임무, 근무환경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직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접적지역 특수지 근무수당과 함정수당, 항공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현실화할 것이다.

병영시설 내에 병영문화쉼터, 풋살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방지역에는 병사 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인가족들을 위해 노후 관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주택의 전세대부 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관사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도시와 격오지 근무자 간 문화 격차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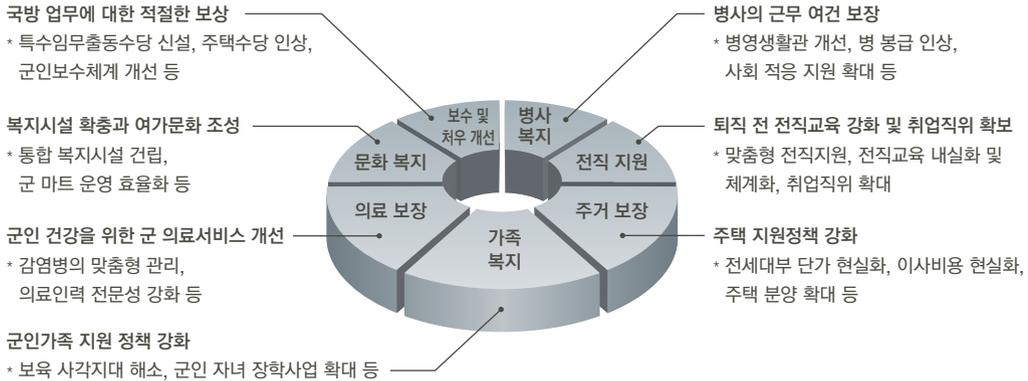
1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



군인복지기본계획
(2013-2017) e-book

이처럼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군인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인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8-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장병 의식주 개선

| 피복·장구류의 품질 개선 | 장병의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기능 고품질의 피복·장구류를 보급하고 있다.

피복류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활동성과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기능성을 추가하여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피복류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양질의 소재에 민간의 우수한 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방수와 땀 배출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전투화를 개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전 장병에게 보급하고 있다.

우의류와 방한복 상의 내·외피, 기능성 장갑, 함상복·함상화 등도 개선하여 연차적으로

〈도표 8-2〉 피복 개선 현황



-  머리 외에 귀, 관자놀이까지 보호가 가능한 신형 방탄헬멧
-  적의 주요 화기에 대한 방호력과 기능성이 향상된 신형 방탄복
-  작전 형태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전투배낭
-  가볍고 방투습능력이 향상된 기능성 전투화
-  방투습능력과 보온성이 향상된 기능성 방한복

보급할 예정이다.

장구류는 전투요원들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방탄복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AK-74 소총탄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다. 전투조끼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를 추가하여 임무에 필요한 물품을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탄헬멧은 과거 특정 부위에 무게가 집중되어 장시간 착용 시 통증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헬멧 내부를 완충패드 형태로, 턱끈은 헬멧이 쉽게 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투활동의 피로도를 줄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 효과를 향상시켰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복과 장구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피복과 장구류는 조기에 보급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 | 우리 군은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식단 편성 시 교육훈련 등 육체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 권장열량 기준인 2,600kcal보다 높은 3,100kcal를 적용하고 있다. 신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식과 양질의 부식, 후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표 8-3〉 1인 1일 기본급식비² 증가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가(원)	5,399	5,650	5,820	6,155	6,432	6,848
증가율(%)	3.6	4.6	3.0	5.8	4.5	6.5
평균(%)	4.3					-

장병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민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조리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조리병을 지도하는 등 급식 맛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대급 규모의 전 취사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 포함하는 순수 식자재비

〈도표 8-4〉 민간조리원 확보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원(명)	1,586	1,710	1,809	1,888	2,029	2,139	2,332
확보율(%)	68	73	78	81	87	92	100

군 급식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는 특수성으로 안전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식자재 계약부터 급식까지 단계별로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자재 계약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업체를 우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연 2회 군납업체에 대한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회수·폐기하고, 위해업체는 군 급식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 향후 생산업체로부터 부대까지 냉장·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 급식유통센터를 2019년까지 권역별로 11개소를 신축하여 급식 안전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병영생활관 현대화 |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03~2009년)로 1982년 이전에 건립되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전방 및 격오지의 생활관을 우선 개선하였다. 2단계(2010~2012년)로 1983년 이후 건립된 생활관을 보수 또는 증축하였으며, 3단계(2013년 이후)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을 개선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소대 단위 침상형 2.3㎡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 6.3㎡로 확대하였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여군을 위한 편의시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표 8-5〉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구분	총소요	확보(~ 2013년)				2014년 이후	
		계	재정	BTL	기타	재정	BTL
육군생활관(대대)	702	678	378	200	100	-	24
해·공군생활관(동)	933	898	683	143	72	35	-
GOP, 해강인 소초(동)	1,081	970	970	-	-	111	-
계	2,716	2,546	2,031	343	172	146	24

3. 장병 복지인프라 확충

국방부는 대기근무가 많은 군인의 복무 특성과 부대 대부분이 도서·산간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육·해·공군 복지단을 통합하여 국군복지단을 창설하였고, 복지시설별로 경영효율화와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장병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월 국방부 부지 내에 국방컨벤션을 완공하였고, 2016년까지 위례신도시 내에 국방문화·연구센터, 군인 아파트, 군인 자녀 기숙사 등 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장병 휴양, 복지 및 주거 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노후한 복지회관과 군 마트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제한되는 해체·이전 예정부대에는 장병들이 쉴 수 있는 ‘병영문화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병영문화쉼터에는 장병들이 여가 시간을 즐겁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병영도서관, 사이버식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병사들

장병들의 체력단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보급하였다. 부대 규모별로 운동기구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에는 694개 부대에, 2013년에는 1,512개 부대에 보급하였다. 또한 풋살경기장은 2013년과 2014년에 전방부대와 도서·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풋살경기장 311개소를 건립하였다.

복지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방 지역에는 병사 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서울 지역에는 2017년까지 ‘용사의 집’을 재건립하여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령도에도 통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 지역 장병과 군인 가족의 복지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향후 국방부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장병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군인가족 지원정책 확대

| 군 보육시설 확대 | 국방부는 열악한 군인 자녀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64개의 군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80개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방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에서 보육아동 15명 이상인 부대로 개선하였다.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부대 관사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부모들은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12월 강원도 철원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 점을 개관하였으며, 2016년까지 1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군인 주거지원 사업 확대 | 이사와 격오지 근무가 잦은 군인에게 가족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주거지원이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주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화되고 협소한 관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가족을 위해 민간 주택의 전세금을 대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역별 전세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군 어린이집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76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수도권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에 1,4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군인 자녀 기숙형학교 개교 | 직업군인은 짧은 보직주기로 군인 자녀들의 전학이 빈번하고 대부분의 군인이 읍·면 지역에 근무함에 따라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3월에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한민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은 전학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 걱정 없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직업군인의 사

기를 증진시키고 우수자원을 영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민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 군인 자녀의 5%만 수용할 수 있어 추가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추가로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발전 계획(2013~2017)」에 기초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군 병원의 전문성·특성화 제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등 의료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1. 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

| 감염병 맞춤형관리 | 국방부는 주요 감염병의 발생주기를 고려하여 감염병 맞춤형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접종백신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A형간염 백신 예방접종은 전방의 일부 신병교육대대 훈련병에서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모든 육군 장병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접종할 때 백일해를 추가하여 접종하도록 하였다. 예방접종 후 통상 15일이 경과한 후에 면역력이 확보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병이 입영 전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전입신병 건강 상담 및 상병 건강검진 보완 | 전입신병이 대대급 군의관과 1:1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병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2012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 제도가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검진군의관을 추가로 운영하고, 검진 시 이상데이터가 발견되면 군의관이 이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입원할



아전병원 24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 전문성 강화 및 특성화 제고

| 군 병원 특성화·전문화 및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군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군 병원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수술 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환경의 특성에 의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병원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군 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상치료 분야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도 중증 외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에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센터 조감도

|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 국군의학연구소는 감염병 예방, 생물학전 대응, 계약직 연구인력 확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군 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단체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검사·진단 능력을 확보하여 감염병 확산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군 의료 연구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군 의료 연구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3. 맞춤형 의로서비스 기반 조성

| 수송환경을 고려한 긴급후송체계 구축 | 2012년에 설립된 국군 의무사령부의 응급환자지원센터는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적합한 군 병원과 후송자산을 안내해주고 있다. 또한 소속 부대의 제한된 후송자산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군 및 관용 헬기 등 다양한 후송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는 응급처치장비만 탑재된 기동헬기로 환자를 후송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도입하여 응급환자가 후송 중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민·관·군 진료 협력 활성화 | 국방부는 국민안전처,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후송과 응급처치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군 병원 및 육·해·공군의 사단급 의무부대도 가장 근접한 지역의 민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해병대사령부는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백령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비인후과·안과 진료, CT 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민간병원과의 진료 협약을 확대하여 장병들의 의료지원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국가가 전역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역장병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 강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방부는 전역예정 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전직지원교육 강화 및 취업직위 확대

| 전직지원 정책 방향 | 전역군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재취업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역장병의 사기는 물론 우수인력 획득 등 국방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직지원 전담부서는 의무복무 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전역간부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취업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전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직기본교육, 개인 취업역량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전역군인 일자리 확보 및 개발을 통해 전역 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2013년 4월)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추진 | 국방부는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전직교육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상당수의 전역군인이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생애 최대 지출시기에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들에게 경력 상담, 전직 교육, 취업지원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직지원교육은 장기복무자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후에는 단기 및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

며, 확대 시 대상자는 연간 4,000여 명에서 16,0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단기복무자에게는 단기 취업지원교육을, 중기복무자에게는 생계형 취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장기복무자에게는 사회기여형 직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국방자격 등 사회 직종과 연계된 군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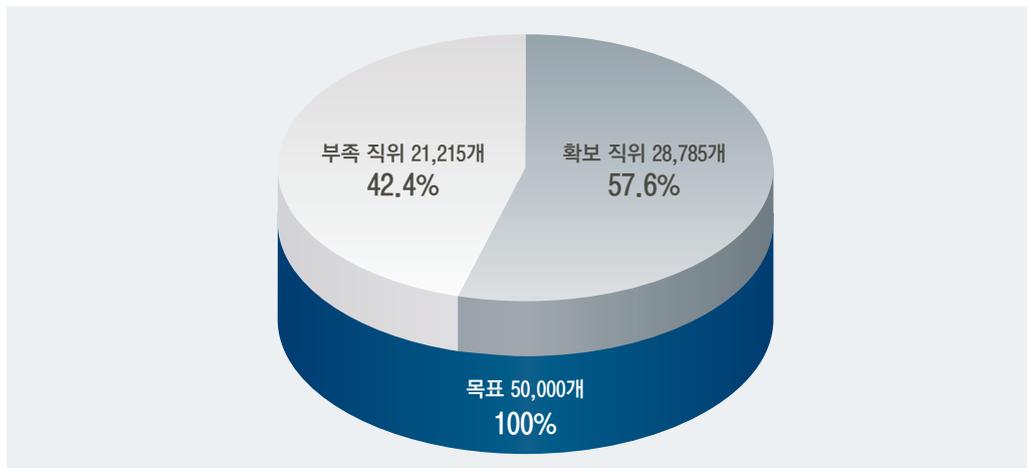
국방전직교육원 조감도(위례신도시 내 건립 중)

| 전역군인 일자리 확보 추진 | 국방부는 전역군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기존 5~12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였다. 장기복무자 위주로 지급하던 취업역량교육비도 2014년부터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전역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목표로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제대군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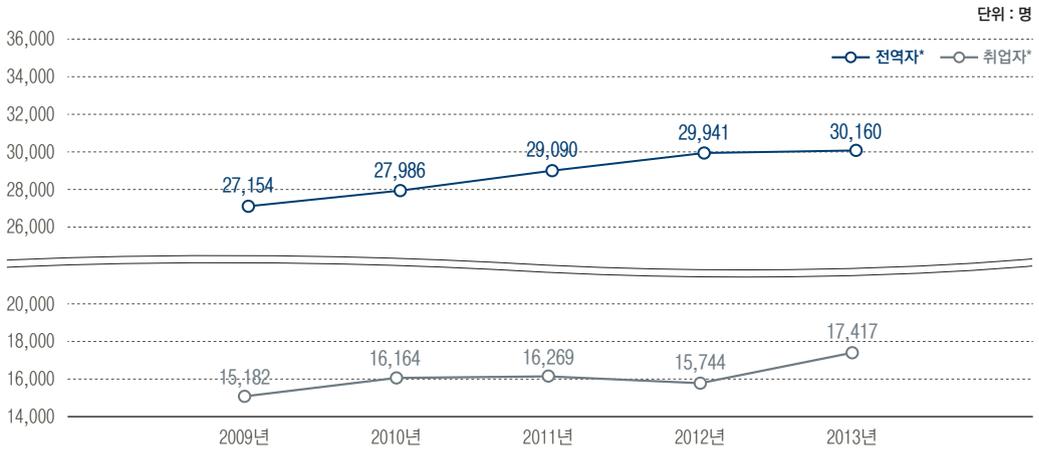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전역군인의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28,785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도표 8-6〉 2013년 5년 이상 복무자 취업직위 확보 현황



국방부는 증기복무 이상 전역간부들의 취업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취업 실적은 <도표 8-7>과 같다.

<도표 8-7> 최근 5년간 취업 실적



* 전역자 : 목표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전역자, * 취업자 : 목표연도 말 기준 취업자

2. 군 복무 보상점제도 도입 추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 이행으로 인한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복무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보상점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1961년 최초 도입되었다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 복무 보상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 내용은 1999년 위헌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한 인원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가산점 혜택을 받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보상점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영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며 생애 최대 지출 기인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에는 사회보험 및 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보상 차원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인연금은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비용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 군인연금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1961년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기금을 적립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2013년에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 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되,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연금지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국방부는 정확한 연금 지급과 행정기관 간 업무 처리를 연계하여 고객만족도와 연금행정 능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7월 연금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5월부터는 금융기능이 탑재된 ‘카드형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연금 수급자의 품격을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제9장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제1절 국방규제 개선 및 국민 권익 증진 198
 제2절 참전군인·희생장병 예우 강화 204
 제3절 대국민 재난 및 안전지원체계 발전 208
 제4절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 개선 212
 제5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216



제1절 국방규제 개선 및 국민 권익 증진

우리 군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과 군의 상생을 목표로 국방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규제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국방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군사시설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소음 대책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으로 군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 국방 분야 규제 개선 | 국방부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 국군복지단 군납제도 개선, 군수품 상용화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 채용 관련 각종 자격기준 개선,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국방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의 적절성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방 규제개혁 추진 특별팀’을 구성하여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2014년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규제 관련 내용을 식별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대국민 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

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국방부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국방 분야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를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일반사망자도 순직자에 준하는 장의·의전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육·해·공군의 1심 결과를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재심 판단 기준이 통일되도록 하였다.

장기간 유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영현(시신 및 유골)이 증가하여 망자에 대한 예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에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 유가족들로 하여금 장기 미인수 영현을 인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이 공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사망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 내 유휴지 활용’도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매입, 지상권 설정, 임차 등의 조치를 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유휴지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각, 기획재정부 인계 등의 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공인시험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웃소싱 및 원가정보시스템 확대 등 원가관리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원가자료 조사제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원가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단체 간 경쟁을 확대하고, 무기체계 구매사업 업체 선정 시 신용도 평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감사, 옴부즈만 활동 확대 등 상시 점검 및 예방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병무행정 분야에서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 감면 기준과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을 강화하여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장애인으로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이 장애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예술요원 편입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기준을 정비하였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체육요원의 재능기부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체 손상과 속임수를 이용한 병역 면탈에 대한 예방 및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인습 타파 및 문화 개선’, ‘관행 혁파’, ‘제도 개선’의 3개 분야를 설정하고 ‘능력에 근거한 인재풀(Pool) 관리’, ‘개인정보보호 강화’,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기부금·위문품 관리 절차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내부제안, 국민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방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투 임무 위주의 강군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2.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 합리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 군 작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008년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기준 15km에서 10km 범위 이내로 축소·조정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억 5,657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3억 257만㎡를 통제보호구역¹에서 제한보호구역²으로 완화하였다.

〈도표 9-1〉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2014년 12월 기준, 단위: 만㎡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제	35,657	21,290	1,281	2,522	4,954	159	2,779	2,672
완화	30,257	24,047	19	267	570	625	76	4,653
합계	65,914	45,337	1,300	2,789	5,524	784	2,855	7,325

1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 또는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과 관련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위임 지역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협의 위탁지역의 현황은 <도표 9-2>와 같다.

<도표 9-2>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위탁지역 현황

2014년 12월 기준, 단위: 만㎡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면적	110,933	49,313	15,020	23,006	5,524	4,056	9,349	4,665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것이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완화와 병행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법령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 시 협의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다.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절차, 허용고도 등을 협의 전에 미리 안내해 주는 사전상담제도도 도입하였다.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설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민·관·군 협력을 통한 규제문제 해결 |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시설 분야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4~5월에 최초로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의 증축 등 70건의 과제를 식별하였다. 이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간 ‘규제 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반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 탄약 안전거리 조정 및 탄약 재배치 | 탄약시설 주변은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안전거리 내에서는 시설물 증축 등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은 탄약시설을 이전하거나 안전거리를 축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있다. 탄약 안전거리를 조정하기 위해 탄약고를 지하터널화하고 탄약 저장량을 최적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도시 지역 군 공항의 소음피해 민원과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시행을 위해 국방부는 2014년에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창설하였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작전수행 효율성, 소음 피해 정도, 재원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군 공항 이전 건의를 검토한다.³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전건의서를 평가하기 위해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군,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소음 실태의 측정,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후의 지원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제정과는 별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비행절차 개선, 비행경로 변경, 야간비행 및 사격 훈련 제한, 인구밀집지역 회피 비행 등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환경친화적 군 운영

| 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개선 | 우리 군은 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3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 절차 : 이전 건의(중전 부지 지자체장) → 이전 건의 검토(국방부장관) →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이전부지 선정 공고 →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 이전부지 선정 심의 → 이전 지원사업 시행

토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유류저장시설의 유류 누출을 막아 주는 방유조와 유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누유감지기를 설치하였다. 시설 주변의 오염도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폐쇄 시에도 사전에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활동 |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국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51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다. 이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17개 반환 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에 정화과정을 공개하고 현장 설명을 실시하여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다. 향후 평택미군기지 완공 후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도 국내 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장병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 마련 | 장병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병이 생활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13년 병영생활관 내 유해물질인 라돈(Rn) 농도 조사결과에서 3,357개지점 중 498개지점 기준치인 148Bq/m³를 초과하였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2,100여 동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실내사격장 운영요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조사 결과 공기 중 납 농도기준치인 0.05mg/m³를 초과한 35개 사격장에 대해 2015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신설되는 사격장에는 새로운 시설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2절 참전군인·희생장병 예우 강화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 호국보훈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장애를 입은 장병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1.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국방부는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여 이를 유해 발굴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계획·조사·발굴·감식·지원의 5개 과, 8개 발굴팀에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에 전문탐사관 4명, 감식관 1명, 2014년에는 조사담당관 1명 등 조사·감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전신 X-ray 등 3종의 감식장비도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4년 9월까지 총 9,354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28,50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하였다. 전사자 신원도 91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보다 많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유해 소재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단 단위 집중발굴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군단이 중심이 되어 지방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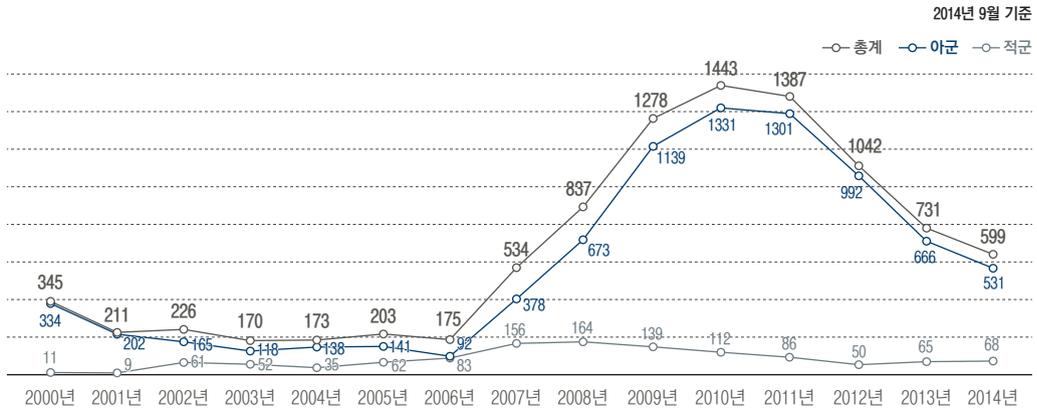
6·25전사자 유해
발굴 홍보영상



참전사실 확인사업
홍보영상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유해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표 9-3〉 연도별 유해 발굴 현황



〈도표 9-4〉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4년 9월 기준, 단위: 명, 구

구분	계	2000~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DNA 채취	28,502	1,923	1,455	2,282	4,524	3,388	4,252	4,765	4,005	1,908
신원 확인	91	22	9	13	10	6	8	11	5	7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 양측은 2008년부터 연 2회 공동 감식활동을 통해 세밀하게 유해를 분석하고 개체 수 산정기준, 발굴 목표 지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신원 미확인 전사자 유해의 국적 확인에 안정동위원소 분석기술을¹ 적용함으로써 국제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그 경험과 기술이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리비아 정부가 반카다피 혁명 기간 동안 발생한 실종자 발굴과 신원 확인 지원을 요청하여 우리 군이 이를 지원²하기도 하였다.

향후 유해발굴감식단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해 발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무한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인체조직(인골, 치아) 내 생활 식습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뼈 조직을 채취 분석하여 출신(한국 또는 북미)지역을 파악하는 방법

2 리비아에 유해발굴감식단 7명을 '리비아실종자확인지원팀'으로 파견(2012. 7. 2. ~ 2014. 7. 28.)

2.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명예 선양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호국원 부부 안장 지원, 보훈병원 부담금 감면, 국민주택 특별분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호국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시설을 개선하고 현충선양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 ‘낙동강지구전투’, ‘춘천지구전투’를 3대 전승행사로 선정하였다. 국민들에게는 승전의식을 고취하고 참전용사들에게는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장비 전시, 체험마당, 전투재연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2014년 9월)

이처럼 국방부는 참전용사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승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순직·장애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방부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장애를 입은 장병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심신장애 1~7급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급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상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도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해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도 공무연관성이 있으면 순직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

원회 등 타 국가기관이 순직을 권고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0월부터는 육·해·공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였으며, 재심사기구는 위원의 과반수를 인권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자해사망자의 공무 연관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격상된 인권의식에 걸맞게 군내 사망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제3절 대국민 재난 및 안전지원체계 발전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1. 대국민 재난지원체계 구축

| 재난 대비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 우리 군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재난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국민 재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재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재난 유형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매뉴얼을 실제 훈련에 적용하면서 보완하는 등 상황조치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둘째,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 400여 개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방서 등 관련 기관들이 지역의 협력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원 과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고 있다.

셋째, 재난 관계관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 국방부 주관으로 육·해·공군 재난관계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국가 핵심기반시설 종사자의 불법 행동 시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기능 인력을 양성·관리하고 있다. 군 기능인력의 관리 현황은 <도표 9-5>와 같다.

<도표 9-5> 주요 분야 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

2014년 9월 기준

구분	계	철도/전동차	발전	가스	화물운송
인원(명)	2,848	1,175	546	320	807

| 긴급구조 및 재난 복구 지원 |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긴급구조 지원 기관으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규모는 연평균 병력 34만여 명과 장비 7천 4백여 대에 이른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29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연인원 9천여 명의 군 기능인력을 전동차 기관사와 승무원으로 즉각 투입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 군은 5만 9천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감염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운영, 방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2014년 2월에는 동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군은 총 12만여 명의 병력과 2천여 대의 장비를 긴급 투입하여 제설작전과 고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통행로 개설, 생필품 보급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해난구조대 등 병력과 함정, 항공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최근 5년간 국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현황은 <도표 9-6>과 같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



조류 인플루엔자 대민지원(2014년 1월)



수해 대민지원(2013년 7월)



동해안 폭설 피해 복구작업(2014년 2월)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지원(2014년 4월)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표 9-6〉 국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복구실적					주요 활동
	병력 (천명)	장비 (대)	인명 구조 (명)	가옥 정리 (동)	농경지 (ha)	도로 /제방 (km)	하우스 /축사 (동)	
2009년	59	1,748	6	260	72	18	537	· 신종플루 검역 지원 · 가뭄 급수 지원
2010년	319	5,500	25	1,985	100	109	3,159	· 대설 피해 복구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 태풍(곶파스), 호우 피해 복구
2011년	616	12,010	-	2,195	147	62	3,250	· 대설 피해 복구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지원 · 태풍(무이파), 호우 피해 복구
2012년	219	6,660	-	3,425	31	43	2,623	· 대설 피해 복구 · 태풍(볼라벤), 호우 피해 복구 · 화물연대 파업
2013년	67	581	-	265	85	74	84	· 대설 · 태풍(다나스), 호우 피해 복구 · 철도노조 파업
2014년 9월	518	12,258	151	362	10	426	175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지원 · 태풍(나크리), 호우 피해 복구 · 세월호 구조
계	1,798	38,757	182	8,492	445	732	9,828	

2. 해외 재난구호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외 재난은 피해 정도가 막대하여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10년 5월 ‘해외긴급구호 군 수송기 임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해외 재난 발생 시 48시간 내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긴급구호대’를 조직하여 매년 출동훈련과 출동화물 수송기 적재 검증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우리 군의 해외 수송능력을 검증하고, 2013년 3월에는 제3차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 대비 출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5월에는 태국과 공동으로 제3차 훈련을 개최하여 역대 훈련 중 가장 많은 27개국 1,8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재난 구호 관련 인원 240여 명이 참가하였다. 육군 전문재난구호부대와 해군 해난구조대는 미국, 호주 등 참여국과 합동으로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난 구호 활동능력을 높였다.

2013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옌이 발생하자 수송기를 지원하여 해외긴급구호대 인원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였다. 필리핀 피해 현장에서도 구호물품을 공수하고, 필리핀 국민과 현지 교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10년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은 <도표 9-7>과 같다.

<도표 9-7>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

시 기	지역/재난	지원 내용
2004. 12.	남아시아/쓰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1대 : 의약품 등 구호물자 5.2톤 함정(LST) 2대 : 굴삭기 16대 등 구호물자 108톤
2006. 3.	필리핀/레이테섬 산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1대 구호물자 7.5톤
2006. 6.	인도네시아/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1대 의류, 식품 등 구호물자 7톤
2008. 5.	중국/대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3대 군용 텐트 등 구호물자 26.6톤
2009. 11.	캄보디아/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1대 생필품 등 구호물자 7톤
2010. 1.	아이티/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군 구조사 1명(의료지원)
2010. 3.	칠레/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용텐트 136동
2011. 3.	동일본/지진, 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10대(총4회) * 구조대 102명 수송 구호물자 58.8톤
2011. 10.	터키/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용 텐트 100동
2013. 11.	필리핀/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기(C-130) 9대(총4회) * 구조대 포함 2,022명 수송 구호물자 329톤

제4절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 개선

국방부는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을 개선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제도,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제도 등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병역면탈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정밀한 징병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병무행정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1. 병역제도 발전

| 병 복무기간 단축 검토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상황 호전, 병 숙련도 저하 대책 마련, 부서관 증원 및 간부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한 적정 국방비 확보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도표 9-8〉 병 복무기간 변천

단위 : 개월

구분	1953년	1959년	1962년	1968년	1977년	1979년	1984년	1990년	1993년	1994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11년
육군 해병	36	33	30	36	33	33	30	30	26	26	24	24	18	21
해군	36	36	36	39	39	35	35	32	30	28	26	26	20	23
공군	36	36	36	39	39	35	35	35	30	30	28	27	21	24

| 모집제도 개선 |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병 부족에 따른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유급지원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급지원병은 〈도표 9-9〉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투·기술 숙련병(유형 I)은 숙련된 일반병 중에서 선발하며, 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범위 내에서 하사로 복무한다.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유형 II)은 입대 전 선발하며 입영 후 3년간 복무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하사로 복무한다.

〈도표 9-9〉 유형별 유급지원병제도 현황

구분	선발기관	복무기간	복무 분야	보수*
전투·기술 숙련병(유형 I)	육·해·공군	6~18개월	전투·기술 숙련 직위	월 135만 원 수준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유형 II)	병무청	3년	첨단장비 운용 직위	월 195만 원 수준

* 2014년 하사 3호봉 기준

최근에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한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의 모집 대상을 현역병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경험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유급지원병의 단기 하사 획득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기술특기병 입영비율이 낮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기술특기병 입영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제도’¹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2년간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해·공군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 | 현재 시행 중인 전환복무² 및 대체복무³제도는 2015년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향후 안보환경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무제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2013년에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지원 업무보다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에서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인력을 증원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 인원 배정을 중단하고

- 1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여 전역 후 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제도
- 2 현역 복무를 대신하여 의무경찰대원, 해양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임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3 현역병을 총원하고 남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공익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맞춤특기병제도
홍보영상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 상근예비역⁴과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 병역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부터 시행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병무행정 개선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⁵를 도입하여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역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긍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되며, 박물관, 병원, 콘도 등의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5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래의 대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운영
-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급 등)
- 일반직 공무원 등(4급 이상)
- 현역 군인(대령 이상)
- 교육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도표 9-10〉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014년 9월 기준, 단위: 가문

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405	568	192	302	301	545	497

| 병역 면탈 방지 대책 강화 | 국방부와 병무청은 질병과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경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 병역 면탈 범죄에 대해 병무청 직원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2014년 11월까지 93명의 병역 면탈 혐의자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병역 면탈 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 정밀한 징병검사 체계 개선 |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예자원을 입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징병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정밀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위해 첨단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정밀한 검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신과 질환을 비롯한 주요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예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규칙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5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투명하고 열린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성공적인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3.0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 국방3.0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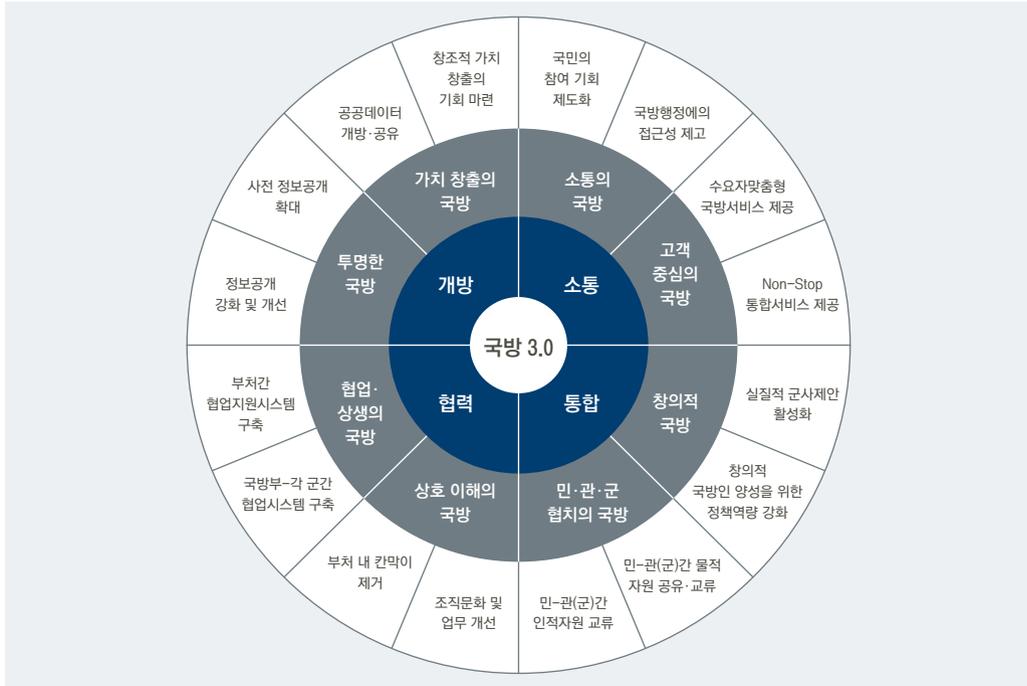
국방부는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 기반인 ‘정부3.0’¹을 구현하면서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3.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3.0이란 개방, 소통, 협력, 통합의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방행정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국방3.0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공정보와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며, 고객집단별 맞춤형·통합형 국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군이 협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국방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관계자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지자체·국방부·합참 협업을 통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1위로 선정되었다. 군 환경정화사업과 기술을 민간에 개방한 사례가 정보 공개를 통한 가치 창출을 인정받아 정부3.0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 초청 정책설명회’, ‘국민참여단 안보현장 견학’ 등 각종 국방3.0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3.0Day, 국방3.0 포털 활성화, 홍보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도표 9-11〉 국방 3.0 추진목표 및 전략



2. 국방정책홍보 활성화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알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영상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뮤직비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미디어를 이용해 군의 긍정적인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2010년에 도입한 국방 SNS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에 더하여 2013년에는 카카오토리, 플리커(Flickr)로 운용 매체를 확대하였다. 국방 SNS를 통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훈련 장면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장병 복지 및 복무제도 등 국방 현안에 대해 젊은 층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국방 SNS 가입자 수는 2012년 말보다 5배 증가한 22만여 명이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직접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행사 개최, 어린이 군인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군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돕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대표전화 : 02)748-1111 민원안내 : 02)748-6891 Fax : 02)748-6895
www.mnd.go.kr
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440-11